



■ 정책보고서 2013-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기준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신화연 · 최현수 · 윤상용 · 이선주

【책임연구자】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장애인연금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공저)

【공동연구진】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이선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현재 크게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2010년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이상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공적연금 가입 추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조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의 중복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급여수준측면에서는 최저보증연금제도로 보기도 어렵다.

국민연금 등 기존의 장애소득보장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기초연금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인상 등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신화연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우리 연구원의 최현수 연구위원, 이선주 연구원과 함께 원외 연구진으로는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가 참여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수록된 연구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3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5 4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7 4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9 4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3 5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6 5
제3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3 6
제1절 독일	6
제2절 미국	6
제3절 캐나다	6
제4절 일본	7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2 7
제4장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안 검토	9 7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적용현황	1 8
제2절 제도개혁방향 검토	2 9
제5장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9 9
제1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10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20 1
제3절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방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2 1 1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참고문헌	15
부록	129
[부록 1]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및 선정기준 개선방안별 분석	9~21
[부록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비교	151

표 목차

〈표 2-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9	4
〈표 2-2〉 등록장애인 현황(2012년말 기준)	1	5
〈표 2-3〉 등록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실태	1	5
〈표 2-4〉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2013년 기준)	4	5
〈표 2-5〉 장애인연금 대상자수(2013년 7월기준)	4	5
〈표 2-6〉 장애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5	5
〈표 2-7〉 장애아동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5	5
〈표 2-8〉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개요	5	5
〈표 2-9〉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액	7	5
〈표 2-1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및 지급총액 추이	7	5
〈표 2-11〉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추이(장애등급별)	8	5
〈표 2-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성별·연령별 분포	8	5
〈표 2-13〉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월액 대비 장애연금액 추이	9	5
〈표 2-14〉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평균 월지급액(2012년말 기준)	0	6
〈표 2-15〉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2012년 5월 기준)	1	6
〈표 2-16〉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비중(잠재수급자층 분석)	2	6
〈표 3-1〉 중증장애인 대비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률 국제비교	3	7
〈표 3-2〉 주요국 장애연금의 이론적·실제적 수준 비교	3	7
〈표 3-3〉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20~64) 장애인의 빈곤율(2008)	4	7
〈표 3-4〉 장애급여지출비중 및 장애급여수급률 국제비교	4	7
〈표 3-5〉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현황	5	7
〈표 4-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	8
〈표 4-2〉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4	8
〈표 4-3〉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5	8
〈표 4-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시행령	6	8
〈표 4-5〉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장애등급별)	9	8
〈표 4-6〉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장애유형별)	0	9
〈표 4-7〉 장애인연금 재정관련 법령	2	9
〈표 4-8〉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3	9
〈표 4-9〉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장애정도별)	4	9

〈표 4-10〉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별 주관적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	5..... 9
〈표 4-11〉 등록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장애등급·장애정도별)	6..... 9
〈표 4-1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소득유형별): 2013년 7월	7..... 9
〈표 4-13〉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추이(2010~2012)	7..... 9
〈표 5-1〉 인구가정: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2·0· 1
〈표 5-2〉 경제변수 가정: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3·0· 1
〈표 5-3〉 전체인구수1) 대비 등록장애인수(2012년말 기준)	4·0· 1
〈표 5-4〉 장애인연금 수급자수(2012년 기준)	5·0· 1
〈표 5-5〉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6·0· 1
〈표 5-6〉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7·0· 1
〈표 5-7〉 장애경증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8·0· 1
〈표 5-8〉 장애아동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8·0· 1
〈표 5-9〉 장애수당 수급자수 전망	9·0· 1
〈표 5-10〉 장애수당 지출규모 전망	0·1· 1
〈표 5-11〉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대상자수 전망	1·1· 1
〈표 5-12〉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지출규모 전망	2·1· 1
〈표 5-13〉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기초급여수준 인상	3·1· 1
〈표 5-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3·1· 1
〈표 5-1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개편방안	5·1· 1
〈표 5-1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개편에 대한 급여지출 전망	5·1· 1

그림 목차

[그림 2-1]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관련 사회적 위험의 종류	7..... 4
[그림 3-1] 독일의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	5..... 6
[그림 3-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7..... 6
[그림 3-3] 캐나다의 장애소득보장과 노령소득보장 체계 비교	9..... 6
[그림 3-4]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7
[그림 3-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간 역할구분	5..... 7
[그림 4-1]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	3..... 8
[그림 4-2]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급여수준(2013년 현재)	7..... 8
[그림 5-1] 장애인연금 지출전망 개요	3·0·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었음.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장애인에게도 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각의 공적제도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서로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제도간 수급조건(장애발생원인 및 시점,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대해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한편 장애인연금 등 장애소득보장제도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인 장애등급기준이 서로 달라, 장애급여간 연계를 통한 소득보장강화에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중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인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 대상자 확대 및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인상 등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향 제시

□ 연구내용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적용현황 및 소득실태분석
 - 장애관련 소득보장제도 및 지방정부의 장애지원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현황파악 및 적용 실태파악
 - 장애소득보장제도별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 현황파악
- 장애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등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 장애연금제도 확대방안별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 분석
 - 제도개선방안별 소득보장수준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향 제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향후과제

II. 장애소득보장체계 개요

1. 우리나라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관

- 일반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현재 크게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 일반국민과 일반장애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시작, 최근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 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가입상태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이상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¹⁾

1) 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39.5만원 대비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 공적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21.6%에서 36.8%(2008년)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20.8%(2005년)에서 34.4%(2008년)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도입에 따라 장애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²⁾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인금은 장애발생과 함께 본인의 기여가 전제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중증장애인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그동안 장애인의 소득보장경로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득중단, 감소에 따른 1차안전망,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을 통한 2차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서 보장을 받음.
 - 비기여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종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공적소득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장애인연금의 시행성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준의 실질적인 가치 보전
 -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2)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장애인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

인상됨.

- 기존 장애수당 및 현행 경증 장애수당의 경우,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됨.

○ 보장단위 개편을 통한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기능 강화

-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지급 대상 선정 및 지원
- 기존 장애수당은 장애인 및 부모 등 전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하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급여지급 대상 선정 및 지원

○ 급여수급 권리성의 강화

-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

□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장애인연금이 주요 OECD 회원국에서와 같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애 급여로서 운용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를 살펴 보면, 다른 분야는 모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보장 분야의 예산 만이 연평균 5.6%의 감소를 보였음.
- OECD(2009)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급여 수급율은 1.5%로서 1995년 0.1%와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였음.
 - 2006년 OECD 회원국 평균인 5.8%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소득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단계적 인상

-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 2013년 예산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서 OECD 회원국 평균 1.2%(2008년 기준)에 비해 낮음.
- 장애급여 수급 후에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 EU 회원국의 경우 장애급여 수급 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26.3%p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p 증가에 그쳤음.
- 특히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지급액 인상이 불 확실함.
 -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추가비용인 월 23.6만원을 목표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2.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표 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개요

구분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연령	18세 미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6급	3~6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63%
급여액 (월액)	20~2만원	2~3만원	기초급여(9.7만원) + 부가급여(2~17만원)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게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
 -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 지급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 대해 소득하위 63% 이하³⁾인 자에게 지급
 - 부가급여 지급대상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⁴⁾
 -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월액)⁵⁾는 기초급여(2013년 9.7만원⁶⁾)와 추가비용 보전차원에서 지급하는 부가급여⁷⁾로 구성

3) 201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를 뜻함.

5) 1인 수급자 중심으로 정리함.

6) 9.7만원은 2013년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임.

7) 장애인연금 중 65세 이상인 경우 1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원(차상위계층), 4만원(차상위 초과자)을 지급함.

〈표 2〉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2013년 기준)

(단위: 월액, 천원)

	기초생활	차상위	차상위초과	시설이용
18~64세	80	70	20	70
65세 이상	170	140	40	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2013년 7월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302천명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58.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은 65세 미만인 194천명(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비 64.3%), 65세 이상은 108천명 수급

〈표 3〉 장애인연금 대상자수(2013년 7월기준)

(단위: 천명, %)

연령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기초생활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시설	합계	
18~64세	108	25	42	23	194	57.1
65세 이상	25	29	47	6	108	60.4
합계	134	55	89	29	302	58.2

주: 중증장애는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뜻함

자료: 1) 장애인수는 2012년말 장애인등록 현황. stat.mw.go.kr에서 인출.

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3년 7월 기준).

□ 장애수당

- 장애수당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경증(장애등급 3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은 매월 2만원(시설이용자)에서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장애등급 1급~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⁸⁾으로 매월 2천원(경증장애, 시설이용자)에서 20만원(중증장애, 기초생활대상자) 지급

- 장애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먼저 부모에게 부양책임이 있고 국가가 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아동수당은 (경증)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급여수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표 4〉 장애수당 급여수준

구분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3만원	중증: 20만원
		경증: 1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장시설)	2만원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차상위 계층	3만원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적용현황

□ 적용현황 및 문제점

-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은 76천명(2012.12)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국민연금공단, 2012).
 - 이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2012년 2,511천명) 대비 2.8%,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대상자가 될 정도의 장애를 가진 20~65세 미만 중증장애인(842천명)⁹⁾
 - 규모 대비로는 8.3%,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대비(2012.12: 2,510만명)로는 0.3%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8)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3년 57.2만원) 120%인 68.7만원 이하인 경우

9)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1급과 장애2급 그리고 장애3급중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규모(고용개발원 장애인통계상의 중증장애 정의)

- 공적연금의 장애연금이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50% 내외를 포괄하는 선진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해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 역할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외에도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을 도입·운영하고 있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게 그 급여액이 워낙 적어 장애인의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실 선진외국의 경우 국민연금이 근로기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급여의 보편성이 높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한 상황임.

□ 장애연금급여 개요

-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자에게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생계보장
- 장애등급과 장애급여의 종류
 - 장애등급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구분되며
 - 1~3급까지는 연금형태, 4급의 경우 일시금만 지급함.
- 장애급여의 수급요건
 - 장애연금 및 장애일시금을 수급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가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물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정해진 장애등급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함.
 - 제1요건 : 소득신고자 내지 납부예외자(임의가입 포함)의 자격 유지 중 장애 발생
 - 제2요건 : 최소가입기간인 1월 이상 보험료 납부 요건

- 제3요건 : 고지기간의 2/3납부요건¹⁰⁾

○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액

-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80%를 생존기간 동안 지급하며, 장애일시금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에 지급함.
-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실제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20년 가입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연금액으로 함.

□ 장애인연금수급자 현황

○ 장애인연금수급자 및 지급총액 추이

- 2012년 기준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총지급액은 2000년 대비 각각 3.5배, 4.4배 가량 증가하였음.
- 반면, 동일기간 장애일시금 수급자와 지급총액은 연금수급자와 지급액(1.6배, 2.7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장애등급별 연금수급자

- 장애1급과 2급의 중증장애등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3급 장애등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장애인연금의 평균수급(월)액 추이

- 장애등급별로 급여율의 차이로 수급액도 그에 상응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장애1급의 경우만 평균수급액이 이론적으로 20년 가입의 노령연금(30%)과 거의 유사해야 하고, 그 80%의 급여율이 보장되는 2급의 경우 약 23%, 60%인 3급의 경우 약 18%를 보이고 있음.
- 전가입자소득월액 대비 전체 장애인연금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의 비율은 2012년 약 21%수준이며 200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음.

10) 보험료고지는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짐(즉, 납부예외상태에서는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미납한 기간이 고지기간의 1/3을 초과하면 수급권이 제한됨.

- 장애연금수급자의 실수령 평균연금액은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비해 높은 편임.
- 이는 장애연금의 산정은 가입자의 실제 가입기간이 아닌 20년의 가상가입 기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음.

○ 장애연금수급자의 연금가입기간별 현황

- 장애발생시점 기준 가입기간이 2~5년인 상태에서 장애연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연금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6년

○ 장애발생시점의 가입상태

- 장애발생 시의 가입상태를 분석해 보면, 소득신고 중 장애 발생은 전체의 80%, 납부예외중 발생은 20%로 대부분 소득신고중에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납부예외 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예외자는 주로 보험료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나아가 장애연금은 대부분 사업장가입자로 있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소득신고자이거나 지역납부예외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60%가 1월 이상 가입요건 및 2/3완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III.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연구: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 독일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 독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반연금 (Allgemeine Rentenversicherung: AR)과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가조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GAE)로 구성

- 국민연금은 피용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질가입자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의 85%를 포괄할 정도로 보편적임.*
- 피용자연금제도인 일반제도 외에도 우리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공무원부양제도, 농어민노령부조제도 그리고 광부연금 등이 있음.
- 노인장애인가조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최저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부조제도임.
- 보편적 생활부조제도가 있지만, 노인장애인가조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부조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 (연령 및 장애요건)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등급은 완전장애와 부분장애로 구분됨.
- 장애등급은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근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일 3시간 미만 근로가 가능한 경우 완전장애, 3~6시간 미만으로 가능한 경우 부분장애로 인정
- (가입요건) 또 최소가입기간 요건(5년 이상 가입)과 최근의 보험료납부요건(장애직전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가입)을 충족해야 함.
- 다만, 학업, 근로불능 등의 기간은 ‘5년’ 기간에서 제외해 주고 있으며, 산재 장애나 군복무 중 장애 또는 학업종료 후 조기장애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위의 두 요건을 크게 완화한 규정 적용
- 이러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천성 장애인 혹은 장애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소득요건) 장애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여 전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연금지급은 중지됨.

- 나아가 개인의 소득이 전가입자평균소득 미만을 벌어들이는 경우에도 일부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준

-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만 지급함.
- 장애의 83%는 완전장애자임.
-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times 가입년당 지급율(약 1.1%)로 산정되며, 가입기간은 장애직전까지 실가입기간(크레딧기간 포함)과 장애시점부터 60세까지의 '가상가입기간'을 100% 고려하여 산정
- 가상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장애전 취득한 생애평균소득 적용
- 장애연금은 기준노령연금지급연령(65세)까지만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

○ 장애인소득보장에서의 국민연금의 역할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독일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범주형 기초보장인 GAE는 극히 '보완적' 역할 수행하도록 설계
- GAE는 국민연금 장애기준으로 중증(완전)장애에 해당하는 18~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급여 지급
- '07년 장애연금수급자는 158만명, GAE 수급자는 31만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2/3를 공적제도에서 보장
- 기타 공적제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임.
- 또 독일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모든 중증장애인이 공적소득보장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 미국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관

- 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OASDI와 부조제도인 노인·장애인 보충적소득보장제도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로 구성
- 국민연금은 피용자와 자영자 등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적 제도이며,
- 보충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우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

○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의 수급요건

- (연령 및 장애요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66세) 이전에 장애발생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으로 기초적 소득('10년 월 1,000달러)조차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가 인정
- 다양한 장애등급 구분은 없으며 완전장애만 인정
- (보험료납부요건) 최근 가입납부이력요건과 최소가입기간 요건으로 구성
- 후자의 경우 각 연령별로 연금가입가능기간을 고려하여 각 연령별 최소가입기간을 다르게 설정(최소 6분기, 최대 40분기)하고 있음.
- 전자의 경우도 일정 연령대별 달리 설정. 31세 이후의 경우 장애발생직전 10년 동안 최소 5년 이상의 가입 요구
- (소득활동요건) 월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 미지급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 OASDI 장애인연금은 40년 가입의 완전노령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
- 장애인금은 생애평균소득월액 × 소득구간별 지급율로 산정하며,
- 생애평균소득월액은 21세이후 부터 장애직전까지의 총소득을 21세부터 장애 시까지의 물리적 가입가능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단, 그 중 소득이 낮은 5년은 제외 가능
- OASDI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므로 가입연당 지급률은 1% 수준임.

-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노령연금으로 전환됨.

○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 OASDI 장애연금은 미국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SSI는 제한적이고 보완제도로서의 역할이 부여된 형태로 두 제도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왜냐하면 '09년 전체 중증장애인 중 OASDI 수급자가 43%, SSI가 16%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40%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 등으로 수급대상에 제외
- OASDI 수급자는 SSI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데, 그 중복수급자 비중은 약 20% 수준임.
- SSI 장애급여는 OASDI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됨.

□ 캐나다

○ 장애인소득보장제도 개관

- 캐나다의 장애인소득보장은 크게 연방정부차원의 소득비례연금(CPP/QPP)와 주정부 차원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SA: Social Assistance)로 구성
- 특히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가와는 달리 캐나다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장은 노인소득보장(기초연금 OAS와 GIS가 추가적으로 더 있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특징임.

○ 장애연금(CPP/QPP) 수급요건

- (연령요건) 65세 미만
- (장애요건) 장애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적 생계수단('09년 월 908달러) 획득에 필요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고(severe) 장기적으로(prolonged)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인 경우에만 인정
- 장애등급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완전장애만 인정

- (보험료납부요건) 최근의 보험료납부요건만 요구
- 최근 6년중 연간 \$4,400 (> 부과소득하한인 3,500달러) 이상의 소득에 기초하여 4년 이상 보험료납부
- 단, 25년 이상 장기 납부한 경우 최근 6년간 3년 이상 납부로 수급요건이 완화(2007년 개정사항)한 예외규정이 있음.
- (소득요건) 월 908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 미지급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

- CPP/QPP 장애인연금은 균등부분(정액)과 비례부분으로 구성. 균등부분은 '09년 \$424.33(A값의 11.7%), 비례부분은 노령연금의 75%
-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이므로 장애인연금의 대체율은 이의 75%인 18.8%
- 균등과 비례부분의 합산 소득대체율은 약 30%임.
- 생애평균소득은 18세~장애까지의 합산소득(노령연금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고려)을 18세~장애까지 가입가능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다만, 7세 미만 자녀의 양육기간, 장애인연금수급기간, 가입가능기간의 15%는 가입가능기간에서 제외(drop out period) 가능

○ 장애인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의 역할

- 국민연금인 CPP/QPP는 캐나다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2009년 기준 중증장애인 중 국민연금 장애인연금수급자의 비중은 38% 수준
- 공적연금의 미진함(사각지대)는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SA)에 의해 보호 제공

□ 일본

○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관

- 일본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공적연금(기초연금+비례연금)과 무기여 복지연금 그리고 생활보호제도로 구성
- 복지연금은 1959년에 일몰제도로 도입하였으나, 1986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20세 전 선천성 장애인에 대해서만 복지연금 계속지급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 (연령요건) 기초연금의 경우 20~65세 전에 장애발생, 후생연금의 경우 65세 전 장애발생
- (장애요건) 일상생활능력 등을 기준으로 2등급(기초) 내지 3등급(후생연금)으로 구분, 1~2등급까지는 두 제도간 동일하고 장애기준도 동일
- (보험료납부요건) 기초연금의 경우 보험료납부기간(보험료면제기간 포함)이 20세 이후부터 장애발생일까지 기간의 2/3 이상에 달할 것을 요구
- 20세 전 선천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복지연금은 납부요건 대신 소득조사 전제
- 후생장애연금의 경우 가입중 요건 + 기초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 충족 요구
- (소득요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두지 않고 있음. 즉, 장애인의 소득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연금 지급

○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 기초연금의 장애연금은 완전기초정액을 기본액으로 하며, 1등급의 경우 기본액의 125%, 2등급은 100%를 지급
- 후생연금의 경우도 장애 1등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25%, 2~3등급의 경우 동일하게 100% 지급
-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 및 소득에 비례하며, 가입기간이 25년(300개월) 미만 가입자의 경우 25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 2등급과 3등급간에는 기본지급율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지만 피부양자연금에서 차등을 둠(즉, 3급의 경우 피부양자연금이 없음)

○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

- 일본은 기초+비례연금의 공적제도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에게 보편적 소득 보장 제공
- 게다가 종전의 일몰제 장애인복지연금, 1986년에 도입된 20세 미만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연금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보완
-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장애인복지연금수급자 포함)는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50%를 포괄
- 이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제도는 그 역할이 미미: '10년 전체인구의 약 1.1%인 180만명 정도가 생활보호 대상이고 신체장애인의 경우 3.6%만 그 대상
- 중요한 점은 복지연금이 기여연금과 서로 배타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어 역할분담이 명확하다는 점임.

□ 해외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 우리나라 장애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편성 문제

- 수급율 및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장애개념(장애범주 및 장애판정기준 등)과 기타 제도적 요소(제도의 성숙도와 내실도, 기초연금 vs 비례연금의 제도유형, 수급요건 등)로 구분됨.
- 이중 제도유형과 제도성숙도 요인을 제외하면, 사실 장애연금수급률은 제도의 내실도와 장애개념에 의해 크게 좌우됨.
- 특히 현재 국민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의학적 장애정의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소득상실 보전이라는 장애연금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
-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바(현황분석)와 같이 제도의 낮은 내실도(지역가입자의 높은 미납률) 역시 우리나라 장애연금의 역할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에서

거의 미미한 역할을 수행 중

- 18~65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수급자 비중은 대체로 관찰대상 선진국의 경우 평균 47%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이 비중은 8~12%에 불과하기 때문

○ 낮은 급여수준 문제

- 우리나라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의 실수령액은 현재 이론적 소득대체율의 34%에 불과함.
- 그러나 다른 선진국의 경우 70~10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물론 선진국의 경우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 20년만 인정해 주고 있고,
- 사각지대도 큰 커 전반적으로 가입기간이 크지 않아 급여수준도 자연히 낮음.
- 또 제도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서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이러한 낮은 급여수준문제를 2010.7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연금'도 상호 배타적으로 설계(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은 거의 받기 어려움)되어 있는데다 그 급여수준도 워낙 낮아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2.4배 정도 높은 실정이며, OECD 평균(22.1%)의 1.6배 더 높은 실정임.*
- 이 통계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전의 상황이나 장애인연금액 자체가 크게 낮아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도입 후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과소보장 속 과잉보장 문제

- 현행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종사 장애연금수급자의 1/3이 A값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계속 지급으로 과잉보장과 기금누수가 우려되고,

-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며,
- 독일, 미국, 캐나다 등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아예 지급을 정지(미국, 캐나다)하거나 감액(독일)하는 것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 소득 및 소득보장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일부는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그리고 근로소득 등을 동시에 향유하는가 하며, 일부는 장애인연금만, 다시 일부는 아무런 연금도 없는 상태로 다원화되고 있음.

IV.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안 검토

〈표 5〉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개요

구분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연령	18세 미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6급	3~6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60%
급여액(월액)	20~2만원	2~3만원	기초급여(9만원) + 부가급여(6~5만원)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수급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 등록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13년 4월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
-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인 96,800원
-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¹¹⁾와 차상위계층¹²⁾,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하고 차등지급

〈표 6〉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구분	18세 ~ 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7만원 지급
-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

11) 일반 재가수급자에 한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부가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1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3년 55만원)의 120% 이하인 경우

로 받던 금액인 14만원 지급

-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된 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 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게는 4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
 -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월 평균 23.6만원)을 고려, 추가 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

○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소요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방식(조세로 충당, 국고보조)

-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기여 연금제도(범주적 공적부조)로서 조세로 충당됨.
- 이전체계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분담으로 되어 있으며 최종지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
- 특별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50%와 지방자치단체 50%의 비용부담,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국고보조 70%와 지방자치단체 30% 부담의 형태로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V.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1.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 기초연금 도입안

-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시기 및 방법은 국회의 연금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었음.

- 2008년 1월 국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이후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제도간 재구조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대안만 제시하고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음.¹³⁾

○ 최근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등 미래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도입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국민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안 제시
- 즉 근로기간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충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에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소득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소득보장체계를 구축

○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볼 수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함.

- 특히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소득활동이 불안정하므로 사실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을 기초연금인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음.

13)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점차 줄여서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향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소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점차 줄여서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무게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사회보장제도간 관계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방안

- 소득보장 성격인 기초급여의 경우 향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2013년부터 매년 일정하게 인상하여 2028년 이후에는 10%로 가정함.
-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 적용시기를 앞당겨서 2014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를 적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지출규모를 전망함.

□ 장애등급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중 소득 하위 63%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등급별로 추가되는 월 평균 소요비용을 살펴본 결과
 - 총 추가비용은 전체 23만 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급이 24만 4천원, 2급 17만 6천원, 3급 중복장애가 8만원으로 나타났음.
- 등급이 낮아질수록 총 추가비용, 장애관련비용 모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장애등급에 따른 필요비용의 지출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등급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이 가장 수준이 높았고, 의료비를 제외할 경우 1급에서는 보호·간병인 비용, 2급, 3급에서는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용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체계 개편방안

-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지급액 인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필요함.

□ 부가급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유형¹⁴⁾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제도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장장애의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 현재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의해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의 체계에서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2013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0%에게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과 관계없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등급별로 부가급여를 차등지급할 경우 부가급여지출 규모 추정

2.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60%를 대상으로 기초급여¹⁵⁾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등록장애인수는 인구수에 장애발생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는 중증 장애발생률은 인구수 대비 중증 장애등록자수로,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로 구분함.

○ 매년 증가하던 등록장애인수가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0년부터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중증 장애발생률 전망을 위해 최근 10년간 장애발생률 추이를 살펴본

14)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장애등급 혹은 장애유형으로 할 수 있으나, 장애유형을 반영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의 과다 및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15)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실이나,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주춤한 것을 고려하여 2011년말 장애발생률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인구의 자연증가분만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수를 전망함.

- 장애인연금 적용률은 중증장애등록자수 대비 수급자수로, 소득하위 63%인 중증장애인을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시설이용자)로 구분하여 전망함.

□ 등록장애인수 전망

- 등록장애인수는 인구수에 장애발생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는 중증 장애발생률은 인구수 대비 중증 장애등록자수로,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로 구분함.
- 매년 증가하던 등록장애인수가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0년부터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중증 장애발생률 전망을 위해 최근 10년간 장애발생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실이나,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주춤한 것을 고려하여 2011년말 장애발생률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인구의 자연증가분만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수를 전망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63%¹⁶⁾에 기초급여¹⁷⁾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

-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중증장애등록자수 대비 수급자수로, 소득하위 60%인 중증장애인을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시설이용자)로 구분하여 전망함.¹⁸⁾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전망

16) 보건복지부(2011) 「2011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참조

17) 65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함.

18)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의 연령집단별 분포를 2011년 복지부 예산안의 장애인연금 대상자수에 적용하여 기초율을 추정함.

○ 장애경증수당 수급자수: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급여지출 전망

○ 기초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증가율¹⁹⁾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A값의 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부가급여액: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7〉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연도	등록 장애인수	수급자수(천명)			전체 수급자수 대비	
		합계	18~64세 (기초급여)	65세 이상	18~64세 (기초급여)	65세 이상
2013	2,560	327	201	127	61.4%	38.6%
2015	2,653	340	203	137	59.8%	40.2%
2020	2,895	370	204	167	55.0%	45.0%
2025	3,203	407	194	213	47.7%	52.3%
2030	3,514	444	183	262	41.1%	58.9%
2035	3,773	475	171	304	36.0%	64.0%
2040	3,978	500	159	340	31.9%	68.1%
2045	4,067	510	150	360	29.4%	70.6%
2050	4,079	511	140	371	27.4%	72.6%
2055	3,971	497	132	365	26.6%	73.4%
2060	3,875	484	121	363	25.0%	75.0%

19)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임금상승률 반영)을 물가상승률로 재평가함.

〈표 8〉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단위: 십억원)

연도	장애인연금 급여지출		
	합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출
2013	511	234	277
2015	561	258	303
2020	947	551	397
2025	1,229	713	516
2030	1,536	883	653
2035	1,843	1,050	793
2040	2,139	1,207	932
2045	2,446	1,388	1,058
2050	2,757	1,581	1,176
2055	3,078	1,812	1,267
2060	3,389	2,021	1,368

□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대상자수 및 급여지출 전망

〈표 9〉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대상자수 전망

(단위: 천명)

연도	등록장애인수	장애소득보장제도			
		합계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63% 수급대상)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
2013	2,560	824	327	365	132
2015	2,653	872	340	377	155
2020	2,895	979	370	409	200
2025	3,203	1,091	407	450	234
2030	3,514	1,199	444	491	264
2035	3,773	1,285	475	525	285
2040	3,978	1,339	500	551	288
2045	4,067	1,355	510	562	283
2050	4,079	1,346	511	562	273
2055	3,971	1,313	497	547	269
2060	3,875	1,271	484	533	254

〈표 10〉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지출규모 전망

연도	급여지출(십억원)			
	합계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63% 수급대상)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2013	1,098	511	162	425
2015	1,527	561	173	793
2020	2,420	947	216	1,257
2025	3,291	1,229	271	1,791
2030	4,275	1,536	332	2,407
2035	5,308	1,843	392	3,073
2040	6,315	2,139	449	3,727
2045	7,345	2,446	499	4,400
2050	8,453	2,757	547	5,149
2055	9,586	3,078	586	5,922
2060	10,636	3,389	631	6,616

3. 장애인연금 확대방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표 11〉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기초급여수준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소득하위 63% →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초연금 도입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 → 10%로 인상
-시나리오 1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인상하여 2028년 이후 10% 적용
-시나리오 2	201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 적용

〈표 12〉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단위: 천명, 십억원)

연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확대시 (소득하위 70%) 대상자수	기초급여지출 규모		
		현행수준 유지시 (5% 지급)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8년부터 10% 지급 (시나리오 1)	2013년부터 1%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 지급 (시나리오 2)
2013	212	234	234	334
2015	238	302	342	604
2020	239	646	947	1,291
2025	228	836	1,505	1,672
2030	214	1,036	2,072	2,072
2035	201	1,231	2,463	2,463
2040	187	1,415	2,830	2,830
2045	176	1,628	3,257	3,257
2050	164	1,854	3,707	3,707
2055	155	2,125	4,250	4,250
2060	142	2,371	4,741	4,741

VI. 결론 및 향후과제

□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 일반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국민연금(1988),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2010.7)’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

– 업무상 장애에 대한 소득보장은 특히 산재보험제도에 의해 이루어짐.

○ 일반국민과 일반장애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역할 수행

□ 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가입상태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이상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²⁰⁾

○ 공적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2005년 21.6%에서 36.8%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20) 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39.5만원 대비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 특히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20.8%(2005년)에서 34.4%(2008년)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도입에 따라 장애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²¹⁾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발생과 함께 본인의 기여가 전제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1)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장애인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

- 기초급여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에 연동하여 매년 결정되므로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이 반영되도록 설정되어 있음.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5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를 향후에 10%(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재구조화 방안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임.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와 장애수당과의 연관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인상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와의 관계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지급액 인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필요함.
 - 현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10%로 2배로 기초급여를 인상할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반면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급에 그 목적이 있는 부가급여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급여를 인상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부가급여를 자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바 있음.
-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인 23.6만원²²⁾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기초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임.

22) 생활비용으로 지출하는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1만원을 추가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됨(변용찬 외(2009) 참고).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성격인 부가급여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 부가급여의 목적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음.
 -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특례적용, 장애등급의 심화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할 경우, 부가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수준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소득격차 발생
- 부가급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유형²³⁾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제도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의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음.
- 현재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의해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
 - 현재의 체계에서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도입전 종전대상자이나 65세가 될 경우, 부가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부가급여의 복잡성으로 인해 65세 이상 보장시설수급자와 경증장애수당자의 경우 소득역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3)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장애등급 혹은 장애유형으로 할 수 있으나, 장애유형을 반영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의 파다 및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기초연금 도입 및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장애인연금 개선방안 검토

○ 기초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인상

-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최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2014년 기준 20만원) 지급하는 방안 2013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음.

* 기초연금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여 최소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법안에 명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욕구별 개별급여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최저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²⁴⁾의 경우 당장 법률개정 필요

- 개별급여화하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국정과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소득보장 제도의 양적·질적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및 제도 성격의 모호성(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단, 지급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증장애 전체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2배 이상 인상할 경우 현행제도에 비해 추가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2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의 유형별로 급여차등지원 및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 향후검토방향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장애인가구의 소득 또한 낮은 수준이나, 현재의 장애인연금의 대상규모나 급여수준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 － 따라서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수준 또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정책실현과정에서 장애인연금을 제도내외적 문제로 구분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간 역할정립 등 중장기 과제와 상관없이 부가급여체계 개선 등 제도내적으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도 초점을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체계를 개편하여 급여수준을 현실화 하는 등의 제도내적 문제를 먼저 개선한 후 기초연금 도입시 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인상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장애인연금 개선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뿐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제도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증장애 전체로 확대하고 기초급여수준 또한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2배로 인상할 경우, 현행제도에 비해 추가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중앙정부의 국고부담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추가재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개선방향

- 우리나라는 의학적 상태만 고려한 엄격한 장애판정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장애범주도 선진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게 적용

- 이로 인해 2011년 기준 장애출현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 5.6%로 OECD 평균인 1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²⁵⁾
-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장애급여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는 선진외국²⁶⁾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체계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 그 역할이 취약
 -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국민연금은 76천명(2011.12)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으로 월평균 40만원 지급
 -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2011년 2,683천명) 대비 2.8%,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8.3%에 불과
-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내포
 -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관계 재정립 필요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 저하
-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및 기초급여 인상
 -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재구조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63%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 인상(2014년 기초연금 도입시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10%로 인상)방안 검토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이 목적

25) 고용개발원(2011) 『2011 장애인고용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6)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사례 참조

-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
- 현재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의해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의 차액 지급
-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장애로 인한 실제추가비용의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가급여를 인상한다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기초연금 도입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동일하게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급에 그 목적이 있는 부가급여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부가급여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차등 지급방안 등 검토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대상자 및 급여수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추가지출비용인 23.6만원²⁷⁾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부가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조정 검토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성격인 부가급여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실태조사 필요

*주요용어: 장애인연금 확대, 기초연금 도입, 부가급여체계 개편

27) 생활비용으로 지출하는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3.6만원을 추가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됨.(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참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현재 크게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²⁸⁾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2010년에 도입된 장애인연금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1년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0.9만명이고 이들 중 기존 대상자였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8만명의 중증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이상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²⁹⁾ 공적연금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21.6%에서 2011년 40.1%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이 20.8%(2005년)에서 32.9% (2011년)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실업률 6.6%, 고용률 36%로 전체인구(경제활동참가율 61.9%, 실업률 3.2%, 고용률 60%)에 비해 노동시장참여가 현저히 낮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1년 기준 337만원)의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조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하다.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중증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20.2%, 실업률 11.8%, 고용률 17.8%로,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47.8%, 실업률 5.4%, 고용률 45.2%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역시 193.7만원으로 경증장애인 200.2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³⁰⁾

28)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장애인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

29) 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39.5만원 대비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성희 외(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어왔던 장애인 연금제도를 2010년 7월부터 도입 실시하였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제도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으로 재편한 것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무기여 연금방식으로 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³¹⁾ 및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여 국민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중간단계로서의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한다는 의의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함께 고려하여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 보장제도라는 점과 동시에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에 비해 향상된 급여와 안정적인 연금지급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수준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보전급여의 사각지대였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서 소득보장체계 외연상 발전이 있었다.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는 소외되었던 일부 장애인에게도 소득보장제도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각각의 공적제도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이 서로 달리 적용됨에 따라 동일한 장애에 대해서도 소득보장제도간 수급조건(장애발생원인 및 시점,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대해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소득보장제도의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한편 장애인연금 등 장애소득보장제도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인 장애등급기준이 서로 달라, 장애급여간 연계를 통한 소득보장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관련 소득보장제도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비교분석하고 해외연구사례를 통해 제도간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소득보장제도간 형평성을

30) 김성희 외(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8년 기준 약 8만명에 불과함.(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2011)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분석 및 개선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제2절 우리나라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1. 소득보장의 성격과 필요성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Moroney(1991)는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석재은(1999)은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2-1] 소득보장의 필요성과 관련 사회적 위험의 종류

- 빈곤상태에 대한 결과적 접근
 - 빈곤
- 소득상실 위험 및 저소득에 대한 예방적(원인적) 접근
 - 근로능력의 영구적 상실: 노령·장애·사망
 - 근로능력의 일시적 상실: 질병·사고
 - 근로기회의 상실: 실업
 - 근로보상의 미흡: 저임금

사회적 위험에는 근로능력 및 기회의 상실정도에 따라 첫째, 근로능력을 영구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한 경우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이 있고 둘째, 근로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질병, 사고의 위험이 있고 셋째, 근로기회를 상실한 경우로 실업의 위험이 있으며 넷째, 근로보상의 미흡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의 위험이 있다.

소득보장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

(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수단이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있고, 불안정성은 개개인에게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성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각종의 소득보장제도를 준비함으로써 각자에게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이러한 제도의 존재자체가 현재의 삶을 근심걱정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의 종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장애급여, 일반소득보장급여, 장애관련 급여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장애급여는 장애인의 고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인 반면, 일반 소득보장 급여는 장애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소득보장 프로그램 중 장애인의 주요 소득원천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공공부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장애관련 급여는 상병급여, 산재급여 등 현재 고용 중이거나 또는 과거의 고용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급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급여 중 서비스 대상 인구(service coverage)가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고 또한 급여 수준(benefit level)이 가장 높은 것은 장애급여로서, 임금을 제외한 장애인의 소득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을 만큼 장애인 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장애급여제도는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Contributory Social Insurance)과 비기여방식으로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그리고 소득 또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장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방식 등 상이한 전략이 다양하게 조합되어 운용된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수단의 조합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장애급여의 제공과 관련하여, 주요 국가에서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두 축으로 삼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소득상실 보전 급여는 기여식 사회보험(공적 연금 중 장애 연금) 또는 비기여식 사회수당(기초장애연금) 또는 사회부조(장애부조) 방식으로, 추가

비용 보전 급여는 사회수당 또는 사회부조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1〉 장애 급여의 구성 요소

유형		보장측면	급여종류	특성
소득보전급여	기본급여	장애인 개인 소득보전	기초급여(정액급여), 소득비례급여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부가급여	부양가족 부양 지원	아동부양수당, 성인부양수당 등	부양가족 및 결혼상태에 따라 차등지급
추가비용급여		장애인의 추가비용보전	이동수당, 간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중증장애수당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자료: De Jong, Philip., Disability and Disability Insurance, in Prinz (Eds.), European Dis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2003.

이러한 장애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수는 일반 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장애급여의 지급액이 일정 정도 삭감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실업급여, 퇴직급여, 공공부조 등 장애인을 포함한 보편적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도 장애인의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특히 퇴직급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3).

장애관련 급여로서 상병급여는 장애 발생 초기에 완전한(total)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애인의 임금 수준과 연동되어 지급되는 급여로서, 대개 최대 1년간 지급되는데,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장애급여 신청 자격을 취득자격을 얻기도 한다. 또한 산재급여는 근무와 관련되어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임금 수준과 연동되어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대개 산재급여는 장애급여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보편적인 추세이다.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일반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현재 크게 국민연금, 무기여 연금제도인 장애인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공무원 등 특수직

역 가입자를 위한 재해보상제도나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장애급여가 있지만, 전자는 공무원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상 장애를 보장하고, 후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장애가 아니라 업무상 장애인 경우에 국한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국민 및 일반장애에 대한 소득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에서 일반국민 및 일반장애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은 실질적으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지만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극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역시 가입과 기여를 전제로 제공되므로 자연히 가입 전 장애, 즉 선천성 장애인이나 국민연금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에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그러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조세방식의 장애인 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일종의 무기여 연금제도로, 향후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일반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문제를 크게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은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역시 상당한 발전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앞으로 상호 조화와 협력 속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장애인소득보장체계 하에서 일반국민이 장애를 당하게 되면, 일단 장애연금 혹은 장애인연금에 의해 일차적 보장을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해소가 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장애에 대한 국가의 개입순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이 장애에 대한 일차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층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이 0층 제도에,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1층 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등이 장애위험에 대한 연금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2층, 3층의 제도화된 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말 등록장애인은 2,511천명으로 이들 중 경증 장애인(3~6등급)이 1,943천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77%이고 중증 장애인(1~2등급)은 572천명으로 나타난다.

등록장애인의 연령계층을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18~64세(1,503천명)이고 중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은 37.1%로 18세 이상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2-2〉 등록장애인 현황(2012년말 기준)

(단위: 명, %)

	1급, 2급, 3급 중증(중증)	3급~6급(경증)	합계	
18세 미만	46,810	29,381	76,191	(3.0)
18~64세	339,938	1,107,779	1,447,717	(57.7)
65세 이상	178,511	808,740	987,251	(39.3)
합계	565,260 (22.5)	1,945,899 (77.5)	2,511,159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2년말 장애인등록 현황. stat.mw.go.kr에서 인출하여 추정

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가입상태를 살펴보면, 등록장애인 중 과반수 이상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³²⁾ 공적연금 가입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 21.6%에서 2008년 36.8%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20.8%(2005년)에서 34.4%(2008년)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등록장애인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상태

구분	미가입	공적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합계
		합계	국민연금	직역연금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66.3%	21.6%	20.8%	0.8%	0.1%	2.1%	100%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62.1%	36.8%	34.4%	2.2%	0.9%	0.3%	100%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59.9%	34.9%	32.9%	2.0%	1.9%	3.2%	100%

주: 2005년은 중복응답, 2008년은 2순위까지 응답한 결과 값임.

자료: 변용찬 외(2006),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외(2009),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외(2012),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2) 장애인은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39.5만원 대비 58.4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제도도입에 따라 장애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무기여 방식의 장애인연금과 사회보험방식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³³⁾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발생과 함께 본인의 기여가 전제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소득보장경로는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소득중단, 감소에 따른 1차 안전망,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을 통한 2차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서 보장을 받고 있다. 비기여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종전의 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공적소득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준의 실질적인 가치 보전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상승분, 물가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인상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수당 및 현행 경증 장애수당의 경우,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노령연금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공적 행정자료 중심의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지급 대상 선정 및 지원되고 있다. 기존 장애수당은 장애인 및 부모 등 전 가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준하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하여 급여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수급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이 주요 OECD 회원국에서와 같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애 급여로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4년간 분야별 장애인복지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분야는 모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소득보장 분야의 예산만이 연평균 5.6%의 감소를 보였다.

33)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장애인연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

OECD(2009)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급여 수급율은 1.5%로서 1995년 0.1%와 비교하면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6년 OECD 회원국 평균인 5.8%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서 OECD 회원국 평균 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급여 수급 후에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EU 회원국의 경우 장애급여 수급 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소득 비중이 26.3%p가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9%p 증가에 그쳤다.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³⁴⁾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지장애)에게 근로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지장애인에 대해 소득하위 63% 이하³⁵⁾인 자에게

34)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 안내 참고

35) 201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

지급하고 있다.

부가급여 지급대상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³⁶⁾로 한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액(월액)³⁷⁾ 또한 기초급여(2013년 9.7만원³⁸⁾)와 추가비용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가급여³⁹⁾로 구성되어 있다.

〈표 2-4〉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2013년 기준)

(단위: 월액, 천원)

	기초생활	차상위	차상위초과	시설이용
18~64세	80	70	20	70
65세 이상	170	140	40	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2013년 7월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302천명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58.2%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은 65세 미만이 194천명(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비 64.3%), 65세 이상은 108천명이 수급하고 있다.

〈표 2-5〉 장애인연금 대상자수(2013년 7월기준)

(단위: 천명, %)

연령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기초생활	차상위	차상위 초과	보장시설	합계	
18~64세	108	25	42	23	194	57.1
65세 이상	25	29	47	6	108	60.4
합계	134	55	89	29	302	58.2

주: 중증장애는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뜻함

자료: 1) 장애인수는 2012년말 장애인등록 현황. stat.mw.go.kr에서 인출.

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3년 7월 기준).

3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를 뜻함.

37) 1인 수급자 중심으로 정리함.

38) 9.7만원은 2013년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임.

39) 장애인연금 중 65세 이상인 경우 17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만원(차상위계층), 4만원(차상위 초과자)을 지급함.

장애수당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경증(장애등급 3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수당은 매월 3만원(시설이용자)에서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급하고 있다.

〈표 2-6〉 장애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단위: 월액, 천원)

	기초생활	차상위	시설이용
경증장애	30		2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18세 미만 장애등급 1급~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⁴⁰⁾으로 매월 2천원(경증장애, 시설이용자)에서 20만원(중증장애, 기초생활대상자)을 지급하고 있다.

〈표 2-7〉 장애아동수당 지급기준(2013년 기준)

(단위: 월액, 천원)

장애정도	기초생활	차상위	시설이용
경증장애	100	100	20
중증장애	200	150	70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아동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므로 먼저 부모에게 부양책임이 있고 국가가 후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경증) 장애수당과 마찬가지로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데 급여수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0)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3년 57.2만원) 120%인 68.7만원 이하인 경우

〈표 2-8〉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개요

구분	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연령	18세 미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6급	3~6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63%
급여액 (월액)	20~2만원	2~3만원	기초급여(9.7만원) + 부가급여(2~17만원)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

1.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 소개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이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게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하여 1~3급까지는 연금형태, 4급의 경우 일시금만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일시금을 수급하려면 다음의 세가지 가입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한 정해진 장애등급요건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제도 ‘가입중’ 요건으로 소득신고자 내지 납부예외자(임의가입 포함)의 자격 유지 중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가입자였더라도 적용제외 중 사고 시에는 장애인금을 수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요건으로 1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장애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월이라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기간의 2/3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장애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보험료고지는 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부예외상태

에서는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료 미납한 기간이 고지기간의 1/3을 초과하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를 생존 기간 동안 지급하며, 장애일시금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에 지급하고 있다. 이때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실체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20년 가입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연금액으로 한다.

〈표 2-9〉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액

구분	지급액
장애1등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2등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3등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4등급	기본연금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

2.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적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

2012년 기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와 총급여지출액을 살펴보면 2000년 대비 각각 3.5배, 4.4배 증가하였다. 반면 동일기간 장애일시금 수급자와 지급총액은 연금수급자와 지급액(1.6배, 2.7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2-1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및 지급총액 추이

구분	장애연금		장애일시금		계	
	수급자(명)	금액(억원)	수급자(명)	금액(억원)	수급자	금액
2000	21,914	701	2,170	158	24,084	859
2003	39,727	1,319	2,853	220	42,580	1,339
2006	61,762	2,256	4,898	442	66,660	2,300
2009	74,535	2,870	3,836	409	78,371	3,279
2010	76,280	2,963	3,447	373	79,727	3,336
2011	75,895	3,055	3,480	419	79,378	3,474
2012	75,934	3,145	2,862	347	78,796	3,492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를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장애1급과 2급의 중증장애등

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3급 장애등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추이(장애등급별)

(단위: 명, %)

구분	장애등급별			계
	1급	2급	3급	
2000	3,873(17.6)	7,751(35.4)	10,290(47.0)	21,914(100)
2003	6,744(16.9)	15,043(37.9)	17,940(45.2)	39,727(100)
2006	9,199(14.8)	21,888(35.4)	30,675(49.8)	61,762(100)
2009	10,783(14.5)	24,274(32.5)	39,478(53.0)	74,535(100)
2010	11,007(14.4)	25,145(33.0)	40,128(52.6)	76,280(100)
2011	11,229(14.8)	25,218(33.2)	39,448(52.0)	75,895(100)
2012	11,307(14.9)	25,400(33.5)	39,227(51.7)	75,934(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수급자가 가장 많고(전체 장애연금 수급자의 40%), 그 다음으로 40대(22.2%)로 나타났는데, 즉 40~50대가 전체 장애연금수급자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연금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85.3%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의 높은 소득 활동참가율 및 가입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2〉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수 성별·연령별 분포

(2012.12월, 단위: 명, %)

구분	계	20세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세 이상
계	69,793 (100)	—	419 (0.6)	5,499 (7.9)	15,491 (22.2)	27,902 (40.0)	9,754 (14.0)	6,822 (9.8)	3,906 (5.6)
남자	59,504 (85.3)	—	285	4,307	13,956	24,439	7,958	5,538	3,021
여자	10,289 (14.7)	—	134	1,192	1,535	3,463	1,796	1,284	885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 주요 사업통계 2012.12월 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평균연금(월)액은 장애등급별로 급여율의 차이로 수금액도 그

에 상응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1급의 경우만 평균수급액이 이론적으로 20년 가입의 노령연금(30%)과 거의 유사해야 하고, 그 80%의 급여율이 보장되는 2급의 경우 약 23%, 60%인 3급의 경우 약 1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월액 대비 전체 장애연금수급자의 평균수급액의 비율은 2012년말 약 21%수준이며 2003년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3〉 국민연금 가입자평균소득월액 대비 장애연금액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평균소득월액	장애연금 평균수급월액(비율)			
		1급	2급	3급	계
2000	1,191	343(28.8)	267(22.4)	178(15.0)	237(19.9)
2003	1,455	408(28.0)	349(24.0)	248(17.1)	308(21.2)
2006	1,633	466(28.5)	374(22.9)	293(17.9)	347(21.2)
2009	1,778	507(28.5)	404(22.7)	315(17.7)	373(21.0)
2010	1,812	524(28.9)	417(23.0)	325(17.9)	386(21.3)
2011	1,875	543(29.0)	431(23.0)	333(17.8)	397(21.2)
2012	1,940	563(29.0)	446(23.0)	345(17.8)	411(21.2)

주: ()은 매년도말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대비 비율임. 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연금액은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장애연금의 산정은 가입자의 실제 가입기간이 아닌 20년의 가상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에 비해 높게 나오고 있다.

〈표 2-14〉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평균 월지급액(2012년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소계	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	분할	소계	1급	2급	3급	
최고	1,605 (82.7)	1,605 (82.7)	1,441	1,605	1,330	1,306	930	603	1,299 (70.0)	1,299	1,062	874	792 (39.3)
평균	301 (15.5)	309 (15.9)	820	407	494	468	199	157	411 (21.2)	563	446	345	242 (12.3)

주: 1) 해당월 지급자의 기본+부양가족연금월액 기준이며, 중복급여조정자 및 동순위자는 조정전 금액임.

2) ()은 '12년말 전가입자평균소득월액(1,875천원)의 비율 즉, 실소득대체율임.

자료: 국민연금공단(2013), 국민연금 주요 사업통계 2012.12

국민연금 가입기간별로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6년으로 나타난다. 장애발생시점 기준 가입기간이 2~5년인 상태에서 장애연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년 미만과 그 이상 납부기간 사이에 수급자규모가 급변하는 것은 1년 미만 가입자집단에서 수급요건(1월 이상+2/3완납요건) 미충족자가 많다는 점, 종전의 1년이상 가입요건의 적용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인 중 특히 전자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년 미만 가입자규모가 전체 가입자의 25%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가입의 장애연금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3.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표 2-15〉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2012년 5월 기준)

가입기간	수급자(명)	가입기간	수급자(명)
1년미만	2,789	12년이상 13년미만	2,114
1년이상 2년미만	6,811	13년이상 14년미만	1,669
2년이상 3년미만	7,184	14년이상 15년미만	1,444
3년이상 4년미만	7,396	15년이상 16년미만	1,259
4년이상 5년미만	7,151	16년이상 17년미만	1,072
5년이상 6년미만	6,790	17년이상 18년미만	821
6년이상 7년미만	5,222	18년이상 19년미만	742
7년이상 8년미만	4,554	19년이상 20년미만	596
8년이상 9년미만	3,889	20년이상 21년미만	445
9년이상 10년미만	3,433	21년이상 22년미만	393
10년이상 11년미만	3,460	22년이상 23년미만	280
11년이상 12년미만	2,625	23년이상 25년미만	180
계			72,319

주: 장애발생시점의 가입기간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2).

장애발생시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분석해 보면, 소득신고 중 장애 발생은 전체의 80%, 납부예외중 발생은 20%로 대부분 소득신고중에 발생하고 있다. 이는 납부예외 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납부예외자는 주로 보험료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애연금은 대부분 사업장가입자로 있을 가장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소득신고자이거나 지역납부예외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60%가 1월 이상 가입요건 및 2/3완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6〉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충족비중(잠재수급자층 분석)

(단위: 천명, %, 2010년 12월 기준)

구분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임의가입자	계
	사업장	지역			
1월 미만(납부 = 0)	44	360	1,778	1	2,183
1월 이상~6월 미만	356	189	832	18	1,395
6월 이상~1년 미만	493	149	492	10	1,144
1년 이상~3년 미만	1,599	452	940	21	3,012
3년 이상~5년 미만	1,421	397	499	25	2,342
5년 이상~10년 미만	2,807	751	507	48	4,113
10년 이상	3,582	1,273	226	15	5,096
가입자 총계 (가)	10,302	3,571	5,273	138	19,284
1월이상 가입 계(나)	10,258	3,211	3,495	136	17,101
2/3완납충족 계(다)1)	9,132	2,198	2,713	112	14,155
나/가 (%)	99.6	89.9	66.3	81.2	88.7
다/가 (%)	88.6	61.6	51.5	81.2	73.4

주: 1) 1월 이상가입과 2/3완납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함.

2) 2010.12월 기준 전체 가입자 중 장애연금 수급요건(1월 이상 가입 및 2/3완납요건)을 충족한 자 분석자료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11)



제3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제1절 독일

제2절 미국

제3절 캐나다

제4절 일본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3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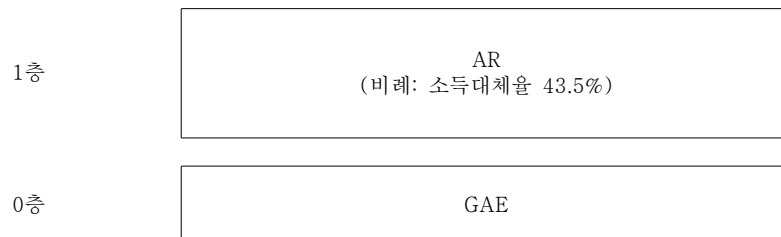
제1절 독일

독일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반연금 (Allgemeine Rentenversicherung: AR)과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가족보장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GAE)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피용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실질가입자의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의 85%를 포괄할 정도로 보편적이다. 피용자연금제도인 일반제도 외에도 우리의 특수직역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로는 공무원부양제도, 농어민노령부조제도 그리고 광부연금 등이 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최저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지급되는 부조제도로 볼 수 있다. 보편적 생활부조제도가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보장제도(GAE)의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부조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독일의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체계



주: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의 완전장애기준임.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연금 수급조건

에 해당되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고 장애등급은 완전장애와 부분장애로 구분한다. 장애등급은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근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일 3시간 미만 근로가 가능할 때에는 완전장애, 3~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부분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최소가입기간 요건(5년 이상 가입)과 최근의 보험료 납부요건(장애직전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가입)을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다만, 학업 및 근로불능 등의 기간은 ‘5년’ 기간에서 제외해 주고 있고, 산재장애평가군복무중 장애 또는 학업종료 후 조기장애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위의 두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후천성 장애인 혹은 장애요건을 원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선천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통해 전가입자 평균소득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고 개인의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미만일 경우에도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장애연금 수급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만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지급연령인 65세까지만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노령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년당 지급률(약 1.1%)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가입기간은 장애직전까지 실제 가입기간(크레딧 기간 포함)과 장애시점부터 60세까지의 ‘가상가입기간’을 100% 고려하여 산정한다. 단 가상가입기간에 대한 소득은 장애전 취득한 생애평균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역할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독일 장애인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범주형 기초보장제도인 GAE는 극히 보완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GAE는 국민연금제도의 장애기준으로 중증(완전)장애에 해당하는 18~65세 미만 저소득 장애인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는 158만명이고 GAE 수급자는 31만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2/3를

공적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다. 공적제도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타 장애인의 경우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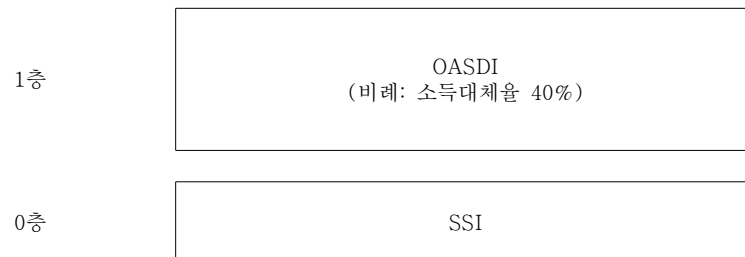
독일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할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모든 중증장애인이 공적소득보장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미국

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OASDI와 부조제도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OASDI는 피용자와 자영자 등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공적부조제도인 SSI는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보충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OASDI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인 66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질환으로 기초 소득(2010년 월 1,000달러)조차도 취득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 때 장애등급 구분은 없고 완전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발생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OASDI 가입 및 납부한 이력과 최소가입기간

요건으로 장애연금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 요건은 각 연령별로 연금 가입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최소가입기간을 다르게 설정하여 최소 6분기에서 최대 40분기까지 적용하고 있다. 제도가입 및 납부이력 또한 연령대별로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 31세 이후에는 장애 발생직전 10년 동안 최소 5년 이상의 제도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OASDI 장애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소득수준인 1,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OASDI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시 지급하는 완전노령연금에 준하는 수준을 보장해 주고 있다. 장애연금은 생애평균소득월액에 소득구간별 지급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생애평균소득월액은 21세 이후 부터 장애직전까지 총소득을 21세부터 장애 시까지의 물리적 가입가능기간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다. 이 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가능기간의 소득이 낮은 5년은 제외하고 장애연금액을 산정한다.

$$\begin{aligned} \text{[연금산식] 연금액(월)} &= \$711 \text{ 이하 소득} \times 0.9 + (\$711 \sim \$4,288 \text{ 소득}) \times 0.32 \\ &\quad + \$4,288 \text{ 초과소득} \times 0.15 \end{aligned}$$

이때 소득이란 개인별 생애평균소득월액을 말함

OASDI는 4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소득자의 40%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입연당 지급률은 1% 수준으로 볼 수 있다. OASDI 장애연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노령연금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에 있어서 OASDI 장애연금은 공적소득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SSI는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제도로서 그 역할이 부여된 형태로 두 제도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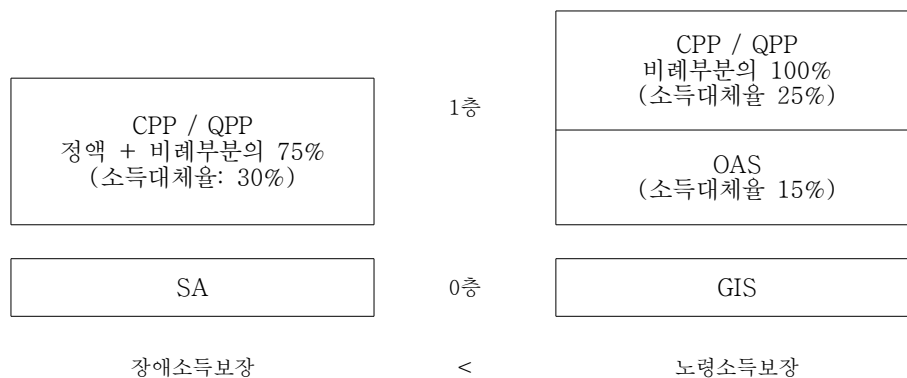
2009년 전체 중증장애인 중 OASDI 수급자는 43%, SSI가 1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ASDI 장애연금 수급자는 SSI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데 중복수급자 비중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고, SSI 장애급여는 OASDI 장애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전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제3절 캐나다

캐나다의 장애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크게 연방정부차원의 소득비례연금(CPP/QPP)과 주정부 차원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Social Assistance: SA)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인 OAS와 GIS 등의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3-3] 캐나다의 장애소득보장과 노령소득보장 체계 비교



CPP와 QPP 장애연금은 65세 미만인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 장애는 미국과 유사하게 기본적인 생계수준인 월 908달러(2009년 기준)에 필요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정도가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에만 인정된다. 장애등급의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완전장애인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CPP와 QPP 장애연금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살펴보면 장애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6년동안 연간 부과소득하한인 \$3,500보다 높은 \$4,4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4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단 2007년 법개정을 통해 25년 이상

보험료를 장기 납부한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최근 6년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한편 월 \$908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CPP와 QPP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정액인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균등부분은 2009년 \$424.33(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11.7%)으로 나타났고 비례부분은 노령연금의 75% 수준이다.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5%이므로 장애인연금 소득대체율은 노령연금 소득대체율 25%의 75%인 18.8%로 볼 수 있고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을 합산한 소득대체율은 약 3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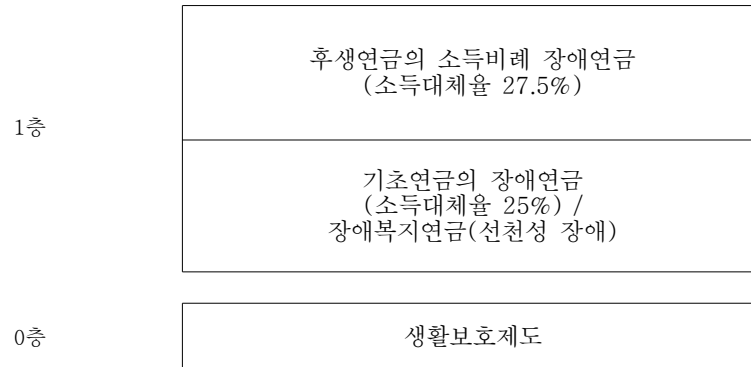
생애평균소득은 18세부터 장애발생시점까지의 합산소득(노령연금의 경우 퇴직시점까지 고려)을 18세부터 장애발생시점까지 가입가능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기간, 장애인연금 수급기간, 가입가능기간의 15%는 가입가능기간에서 제외할(drop out period) 수 있다.

캐나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에 있어 CPP와 QPP 장애인금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 중 CPP와 QPP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중은 38% 수준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주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SA)에서 보호하고 있다.

제4절 일본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크게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과 무기여 복지연금 및 생활보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연금은 1959년에 일몰제도로 도입하였으나, 1986년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20세 이전 선천성 장애인에 대해서만 복지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그림 3-4]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주: 소득대체율은 완전장애기준임.

장애연금의 지급요건은 기초연금의 경우 20~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고 소득비례부문인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등급은 일상생활능력 등을 반영하여 2등급(기초연금) 내지 3등급(후생연금)으로 구분하고 1~2등급까지는 기초연금과 후생연금 제도간 동일한 장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 납부조건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보험료 면제기간을 포함한 납부기간(보험료 면제기간 포함)이 20세 이후부터 장애발생일까지 기간의 2/3 이상에 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후생장애연금은 가입중 장애발생요건과 기초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세 이전 선천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복지연금은 납부요건 대신 소득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소득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장애연금은 완전기초정액을 기본연금액으로 하여 1등급은 기본연금액의 125%, 2등급은 100%를 지급하고 있다. 후생연금의 장애연금도 장애 1등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25%, 2~3등급의 경우 동일하게 100%를 지급한다.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비례하며, 가입기간이 25년(300개월) 미만 가입자의 경우 25년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장애 2등급과 3등급 간에 기본지급율에서는 차등을 두지 않지만 피부양자 연금에서 차등을 두고 있어 3급의 경우 피부양자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공적연금제도가 주축이 되어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일몰제 장애인복지연금과 1986년에 도입된 20세 미만 선천성 장애인에 대한 복지연금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복지연금이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연금 및 후생연금과 서로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인복지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공적연금제도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50%를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생활보호제도는 그 역할이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전체인구의 약 1.1%인 180만명 정도가 생활보호제도 대상이고 신체 장애인의 경우 3.6%가 생활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우리나라 장애소득보장제도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제도 적용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율과 보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와외적으로 장애개념 즉 장애범주와 장애판정기준 등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와 제도내실화 및 수급요건 등의 제도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를 제외하면, 사실 장애연금 수급률은 제도의 내실화와 장애개념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에서 적용하고 있는 엄격한 의학적 장애정의는 보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소득상실 보전이라는 장애연금의 원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장애연금제도에 대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가입자의 높은 납부예외자 비율 등 제도의 내실화 역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역할을 제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에서 거의 미

미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65세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급자 비중은 대체로 해외 선진국의 경우 평균 47%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중증장애인 대비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수급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국민연금)	독일 (AR)	미국 (OASDI)	캐나다 (CPP/QPP)	일본 (기초연금)
연도	2010	2007	2009	2009	2001
수급률(%)	8(12)	66	33	38	50

주: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개발원의 장애인통계상의 중증장애인 규모(842천명)를 고려한다면 8%(70천명/842천명), 장애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규모를 고려할 경우 12%(70천명/582천명)임.

자료: 이용하(2010).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대체율이 34%로 나타났는데, 다른 선진국의 경우 70~100%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 실제로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의 경우 20년만 인정해 주고 있고, 연금사각지대도 커서 전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지 않아 급여수준도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주요국 장애연금의 이론적·실제적 수준 비교

구분	한국 (비례)	일본		미국 (비례)	독일 (비례)	캐나다 (비례)
		기초	후생			
이론적 대체율 ¹⁾ (A)	65.0 ³⁾	25.0	52.5	40.0	43.5	30.0
실수급자 대체율 ²⁾ (B)	22.0	23.1	32.8	38.0	27.8	22.1
B/A	33.9	92.4	62.8	95.0	64.0	73.7

주: 1) 완전가입(40년 가입)과 완전장애를 전제로 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임.

2)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기존수급자의 월평균연금액의 비율임.

3) 지난 20년간 기준지급율의 평균값(70%+60%/2)임.

자료: 이용하(2010)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한쪽을 받으면 다른 쪽은 거의 받기 어려운 상호 배타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다 장애인연금의 급

여수준도 낮아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낮은 급여수준을 보완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2.4배 정도 높은 실정이며, OECD 평균인 22.1% 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비교시점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이나, 장애인연금액 자체가 낮아 빈곤율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3〉 OECD 국가 근로가능연령(20~64) 장애인의 빈곤율(2008)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OECD-27
장애인	35.6	47.6	20.7	32.2	23.6	22.1
비장애인	14.6	24.0	11.1	17.2	11.6	14.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1).

한편 GDP 대비 우리나라 장애급여지출 비중이나 장애연금 수급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4〉 장애급여지출비중 및 장애급여수급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	OECD-27
지출비중 (2007)	0.3	2.4	0.5	0.5	1.7	2.0
수급률 (2008)	1.6	3.9	2.1	4.4	6.2	5.7

주: 1) 장애급여는 장애연금과 상병급여(산재 등)를 포함한 개념임.

2) 장애급여지출 비중은 GDP 대비 지출 비중임.

3) 장애급여수급률은 근로가능연령 20~64세 대비 장애급여수급자 비중임.

4)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 전의 지출비중과 수급률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1)

현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1/3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독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아예 지급을 정지(미국, 캐나다)하거나 감액(독일)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관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5〉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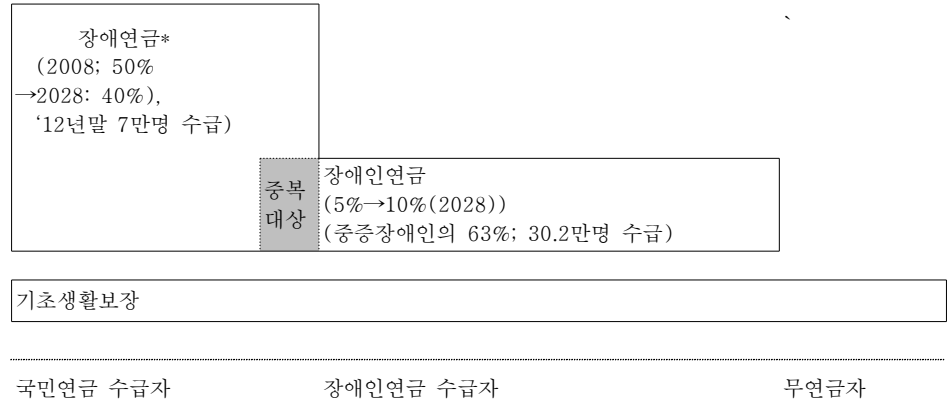
(2009.8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장애연금				일시금
		소계	장애 1등급	장애 2등급	장애 3등급	장애 4등급
장애연금 수급자 수	68,596	68,303	9,836	22,408	36,059	293
그 중 소득활동자 ¹⁾	18,363	18,189	768	4,162	13,259	174
그 중 A값 ²⁾ 이상 소득자	6,093	6,043	234	1,232	4,577	50

주: 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
2) A값 : 1,751천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2009)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소득 및 소득보장제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근로소득 등을 동시에 누리는가 하면, 대부분은 장애인연금만 수급하거나 아무런 연금도 없는 상태로 다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5]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제도간 역할구분



주: 20년 기준가입기간에 기초할 경우 급여수준은 25%→20%임.

OECD 회원국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 비용 급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소득보장 전략을 조합하여 운용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러한 2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 중에서 재원의 규모와 지급 대상자 규모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소득보전 급여로 볼 수 있다. 각국이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보다 더 큰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연금과 공적부조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도 대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국의 소득보전 급여체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충분히 높게 설계되어 있고, 각각의 소득보전 급여가 대상자를 달리하는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연금과 장애부조와의 동시 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이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층 연금체제로서 보편적인 공적연금제도 내에 설계되어 있는 기초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소득비례 장애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기초장애연금과 소득비례 장애연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비용 급여는 소득보전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비용 급여의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납입액 및 근로능력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소득상실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진 연금액 산정 공식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장애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부조의 지급수준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의 본인기여방식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최저임금 대비 장애연금 비중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7%로서 호주와 영국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룩셈부르크(99%)와 스페인(118%)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영국의 경우 장애연금 뿐만 아니라 장애부조, 장애수당, 실업급여, 퇴직급여 등 장애인이 수급할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급여가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

당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수급할 수 있는 공적 급여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향

제1절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제2절 제도개혁방향 검토

4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향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적용현황

1. 장애인연금제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

가. 대상자 선정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⁴¹⁾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하며 그 중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⁴²⁾만 해당된다. 즉, 보편주의적 접근보다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의 진단적 특성 및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주의적 접근이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41)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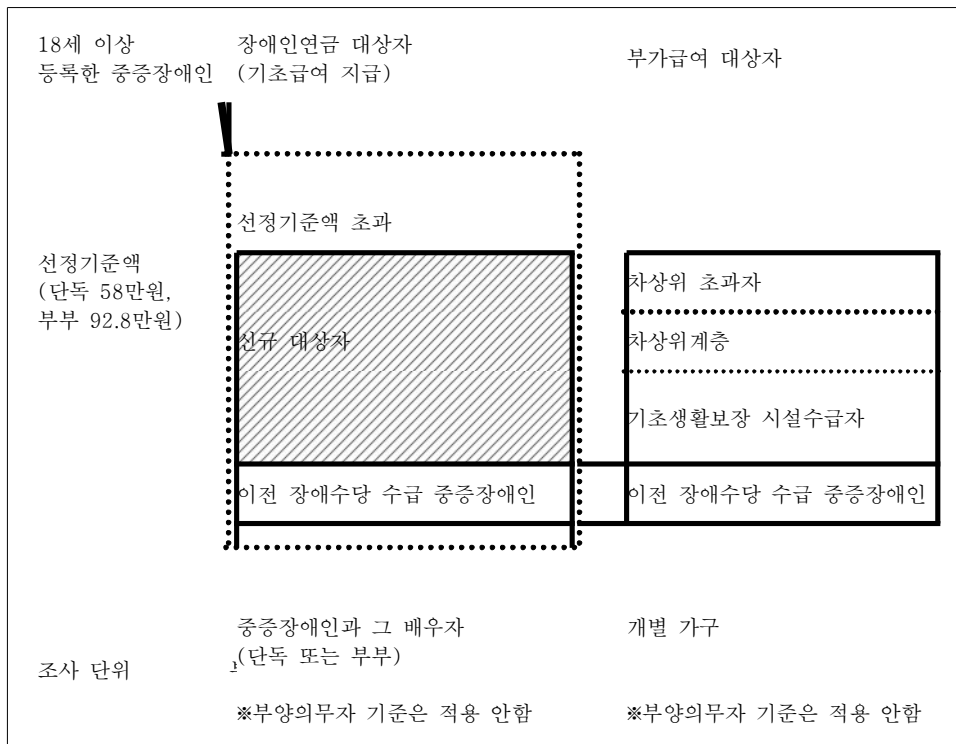
42) 3급 중복 장애는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하나 이상 있는 자로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으로 인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된다.

〈표 4-1〉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p>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상시 근로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 1인당 월 45만원 - 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 수당, 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평가를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 회한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p>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자동차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별사법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1억 8백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6천 8백만원, 농어촌(도의 군)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자동차가액: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없음. (1~6급 장애인 보유 자동차도 전부 포함) - 일반재산에서만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 및 금융 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 미공제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데, 201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에서 2013년 현재 단독 가구 58만원, 부부가구 92.8만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단 장애인연금 도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대상자에 포함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 도의 선정기준액을 당연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림 4-1]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



나. 급여의 형태

대상자가 받기로 된 급여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급여이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기초급여의 급여액은 18~64세의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의 5%⁴³⁾이며, A값은 물가변동 및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변하게 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이를 준용하

43) 2013년 4월~2014년 3월 기준으로 완전지급액은 96,800원임.

기 때문에 기초급여액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65세가 되면,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된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7만 6천원을 지급하고(2013. 4월 ~ 2014. 3월)⁴⁴⁾,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한다⁴⁵⁾. 이를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1인가구					
소득인정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52만원 미만	52만원 이상 54만원 미만	54만원 이상 56만원 미만	56만원 이상 5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84.8만원미만	84.8만원 이상 86.8만원 미만	86.8만원 이상 88.8만원 미만	88.8만원 이상 90.8만원 미만	90.8만원 이상 92.8만원 이하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96,8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80.8만원 미만	80.8만원 이상 84.8만원 미만	84.8만원 이상 88.8만원 미만	88.8만원 이상 92.8만원 미만	
선정기준액과의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기초급여액	154,9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주: 1)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 지급기준

2)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의 경우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모두 적용한 결과임.

44) 2013년 4월~2014년 3월 기준으로 77,440원(96,800원 × 0.8)임.

45) 감액대상자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자에 대한 것으로 둘 간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함. 또한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감액함.

부가급여는 18세 이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차상위계층 및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⁴⁶⁾에게 지급한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를 15만원을 지급하고,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2만원을 지급하며⁴⁷⁾, 만 65세가 된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을 지급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부가급여의 성격이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보전이기 때문에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표 4-3〉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구분	18세 ~ 64세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8만원	17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7만원(14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법 제7조에는 부가급여에 대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4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를 뜻함.

47) 단 2010년 7월 1일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을 지급함.

〈표 4-4〉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시행령

구 분	월 지급액
1.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8만원 17만원
2.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 가. 65세 미만인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단,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는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7만원 7만원
3. 수급권자가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7만원
4. 수급권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2만원(65세 미만) 4만원(65세 이상)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17만원을 지급하며, 만 65세가 된 자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자는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4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만 65세(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가 된 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보장시설 장애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7만원을 지급하며,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계층에게는 4만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성격이기 때문에 기초급여처럼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 4-2] 장애인연금 대상자와 급여수준(2013년 현재)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기초급여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 급여
			단 독	부부인	경우		
				1 인 수급	2인 모두 수 급시 부부감액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재가)	18~64	96,800원	77,440원	X	8만원	
		65~	-	-	-	17만원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수 급자 (보장시설)	18~64	96,800원	77,440원	X	-	
		65~	-	-	-	0 (7만원) ¹⁾	
장애인연금	차상위 계층	18~64	최고 96,800원	최고 77,440원	O	7만원	
		65~	-	-	-	7만원 (14만원) ³⁾	
장애인연금	차상위초과자 (소득하위 63%)	18~64	최고 96,800원	최고 77,440원	O	2만원	
		65~	-	-	-	4만원	

주: 1) 시설수급자 중 1945년 6월 30일 이전출생자는 ()안의 금액으로 결정

2) 2013년 4월 ~ 2014년 3월 기준

3) 종전 장애수당을 받던 수급자와의 차이는 65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의 경우 부가급여를 14만원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음.

타 급여와의 관계에 있어, 장애수당과의 관계는 종전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과 경증 장애수당으로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장시설 장애수당을 받던 경증장애인(월 2만원)과 장애아동(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은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해당 금액을 계속 지급하며,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없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하며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수당(장애인재활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계속 지급이 가능하다⁴⁸⁾.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의 매월 추가로 드는 생활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생활비용에 못 미치는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와 부가급여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48) 2011년도 중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연금 일괄변환자) 중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에 대해 재조사(자산조사)를 실시함.

2. 장애인연금제도 부가급여체계

부가급여는 법에 명시된 것처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초급여가 소득보전의 성격이라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의 보전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가급여 형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 대상자 선정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에서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의 대상은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초급여와 대상자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 통일되지 못한 급여체계의 문제라면,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장애로 인한 전체 추가 소요비용은 월평균 약 16만원이며 이 중 의료비가 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3만 2천원, 기타비용이 1만 2천원, 교통비 2만 3천원, 보호·간병인 1만 4천원, 교육비와 부모사후대비가 6천원, 재활기관이용료가 2천원, 통신비가 1만원 규모의 지출수준을 보였다. 등급별로 보면, 1급이 총 추가비용 26만 4천원, 2급 17만 4천원, 3급 16만 1천원, 4급 23만 7천원, 5급 10만 5천원, 6급 6만 6천원의 분포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등급이 낮아질수록 총 추가비용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나 4급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은데 이는 기타비용의 영향 때문이다.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장애인관련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1급이 17만 4천원으로 그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점차적으로 낮아져 6급이 4만 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등급별로 특정항목의 지출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1급의 경우 대체로 장애정도가 중증임과 동시에 거동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의료비와 보호·간병인 비용,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크다. 추가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교통비 수준이 높은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장애정도별로 볼 때, 중증장애인의 총 추가소요비용과 장애인관련비용은 각각 23만 6천원, 15만 1천원이고, 경증장애인은 12만 4천원, 7만 8천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소요비용(장애등급별)

(단위: 천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중증	경증	전체
의료비	80.4	78.7	46.0	62.7	51.5	34.6	80.9	44.3	56.8
보호·간병인	46.1	10.1	5.8	9.9	0.9	0.7	36.5	4.6	14.1
재활기관이용료	6.9	5.4	0.8	0.2	0.0	0.0	6.5	0.4	1.9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40.1	28.2	67.1	48.9	27.1	12.9	27.5	28.8	31.7
교통비	32.2	22.2	14.8	14.3	16.8	11.4	33.3	19.3	22.8
교육비	16.9	10.7	8.4	0.2	2.9	1.0	15.5	2.9	6.0
통신비	4.5	3.4	0.4	0.2	0.2	0.4	8.5	10.2	9.6
부양가족대차비	12.4	9.0	9.2	1.5	3.8	2.6	8.8	4.1	5.4
기타	25.0	6.4	9.2	100.0	2.1	3.3	18.6	10.0	12.3
장애관련비용	173.5	122.4	119.7	121.7	79.5	48.2	151.4	78.1	104.5
전체 추가비용	264.5	174.1	161.7	237.9	105.2	66.9	236.0	124.7	160.7

주: 1) 중증장애의 경우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증장애는 3급~6급을 뜻함.

2) 중복응답비용

3) 장애관련비용은 장애로 인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료비, 보호·간병인, 재활기관이용료,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의 합

자료: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재정리.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전체 추가비용 59만 7천원, 장애관련비용 53만 1천원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지출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의료비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장애관련비용의 측면에서는 간장애를 제외하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가 2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규모를 보였고, 지체장애와 안면장애가 10만원 이상의 지출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장애들은 10만원 이하의 장애관련비용 지출규모를 보였다. 의료비용은 간장애가 51만 2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장장애와 심장장애가 25만원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뇌병변장애와 호흡기장애, 안면장애가 10만원 이상, 나머지 장애는 10만원 미만의 지출수준을 보였다. 보호·간병인 비용은 뇌병변장애가 5만 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루요루장애 3만 1천원, 자폐성장애 1만 7천원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장애가 1만원 이하의 지출규모를 기록했다. 재활기관 이용료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6만 9천원, 지적장애 1만 3천원 수준을 보였다.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는 장루요루장애가 11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청각 장애 8만 2천원, 간질장애 8만원, 호흡기장애가 4만 9천원, 지체장애 3만 4천원, 뇌병변장애가 1만 8천원, 나머지가 1만원 이하의 지출수준을 보였다.

〈표 4-6〉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장애유형별)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의료비	49.3	122.3	18.3	5.9	28.7	23.8	64.5	50.8	167.3	127.7	162.8	512.2	86.4	91.7	61.5	56.8
보호·간병인	9.5	53.6	6.2	0.8	0.0	11.0	17.0	2.2	4.5	0.0	3.0	19.1	0.0	31.6	10.3	14.1
재활기관 이용료	0.1	3.7	0.0	0.6	2.8	13.3	69.7	0.3	0.0	0.0	0.0	0.0	0.0	0.0	0.0	1.9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33.5	17.6	12.4	82.1	0.0	1.9	9.6	0.0	10.8	2.0	44.9	0.0	0.7	117.2	79.6	31.7
교통비	27.7	28.6	10.8	4.2	17.2	36.0	85.7	12.5	48.8	20.9	33.4	60.6	18.0	14.0	7.2	22.8
교육비	1.1	5.8	2.0	0.7	32.2	49.7	200.4	0.0	0.0	0.0	1.1	0.0	15.8	0.0	0.0	6.0
통신비	1.8	3.1	28.9	24.1	24.2	8.7	12.5	2.5	6.4	1.1	1.1	0.0	1.5	1.1	3.6	9.6
부조류 대비	4.6	1.9	4.5	1.0	15.4	35.2	41.8	3.7	1.9	9.0	0.0	0.7	0.0	0.0	3.8	5.4
기타	14.1	37.6	1.1	0.2	5.9	8.8	1.8	1.8	1.9	11.6	8.7	4.4	0.0	8.2	1.7	12.3
장애관련 비용	92.4	197.2	36.9	89.4	31.5	50	160.8	53.3	182.6	129.7	210.7	531.3	87.1	240.5	151.4	104.5
전체 추가비용	141.5	274.2	84.2	119.6	126.4	188.4	503.2	73.8	241.6	172.3	255.0	597.0	122.4	263.8	167.8	160.7

주: 1) 장애관련비용은 장애로 인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료비, 보호·간병인, 재활기관이용료,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의 합

2) 중복응답비용

자료: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제정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볼 때,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장애등급,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내에서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애관련비용에서는 중증장애의 경우 15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가 53만 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적장애가 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등급과 유형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는 간장애, 간질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들은 중증일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증가하기보다는 장애등급 내에서 장애유형별로 추가지출비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부가급여의 형태는 장애등급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내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차

상위초과자에 따라 동일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 인해 더욱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가급여의 수준 자체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을 상쇄하기 어렵다. 현재 부가급여의 수준은 특례를 제외하면 최고수준이 8만원으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중증장애인의 장애관련비용 평균액인 15만 1천원에도 한참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재정방식

재정양식은 크게 재원(source of funds)과 이전체계(system of transfer)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재원은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형태, 일반조세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형태, 민간의 기부금 혹은 이를 혼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기여 연금제도로써 장애인이라는 대상적 특성과 소득자산조사에 근거한 범주적 공적부조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이전체계는 재정공급자(재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에게로 재정을 이전할 때 어떤 제도적 구조를 통해 이전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것으로서, 장애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분담으로 이전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지급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연금의 이전체계는 국가,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50%와 지방자치단체 50%의 비용부담과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국고보조 70%와 지방자치단체 30% 부담의 형태로 서울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고보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조례에 따라 상호 분담하고 있다.

〈표 4-7〉 장애인연금 재정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p><법령> 제21조(비용의 부담)</p> <p>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한다.</p>
	<p><시행령> 제14조(비용의 부담 등)</p> <p>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0분의 70 <p>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제2절 제도개혁방향 검토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열악하고 제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다. 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소득활동이 어려우며, 설령 고용되더라도 고용기간, 급여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이로 인해 소득수준 역시 현저하게 낮다. 게다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장애인에게 있어 소득보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이에 따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상태와 장애인연금 적용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가. 장애인 경제상태

1)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010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2,376,431명으로 15~64세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는 1,462,406명, 65세 이상은 914,025명으로 각각 61.5%, 38.5%의

비율을 보였다. 경제활동인구는 915,217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461,214명으로 38.5%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으며, 이 중 취업자는 855,158명으로 36%의 고용률을, 실업자는 60,059명으로 6.6%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동 기간 총 인구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61.9%, 고용률은 60%로 장애인 인구에 비해 각각 23.4%p, 24%p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3.2%로 장애인 인구 실업률(6.6%)에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매우 낮으며 반면에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단위: 천명, %, 2010년 5월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 인구	15-64세	1,462	61.5	732	680	52	731	50.0	7.1	46.5
	65세 이상	914	38.5	183	175	8	731	20.1	4.4	19.2
	전체	2,376	100.0	915	855	60	1,461	38.5	6.6	36.0
총 인구	15-64세	35,162	86.7	23,374	22,599	775	11,788	66.5	3.3	64.3
	65세 이상	5,371	13.3	1,725	1,707	18	3,646	32.1	1.1	31.8
	전체	40,533	100.0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100

2) 실업률 =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 = (취업자 수/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100

4)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0년 5월) 참조

자료: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0)

장애정도별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의 인구수는 797,530명, 경증장애인은 1,578,901명으로 각각 33.6%, 66.4%의 비율을 보였다.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745,155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47.8%, 취업자는 713,056명으로 고용률 45.2%, 실업자는 41,099명으로 실업률 5.4%를 기록한 반면에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161,062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20.2%, 취업자는 142,102명으로 고용률 17.8%, 실업자는 18,960명으로 실업률 11.8%를 보였다. 장애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27.6%p, 고용률은 27.4%p 낮은 반면에 실업률은 6.4%p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기가 경증

장애인에 비해 어려워 노동시장참여 자체가 제한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의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9〉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장애정도별)

(단위: 명, %, 2010년 5월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인구수	비중	소계	취업자	실업자				
중증	797,530	33.6	161,062	142,102	18,960	636,468	20.2	11.8	17.8
경증	1,578,901	66.4	745,155	713,056	41,099	824,746	47.8	5.4	45.2
전체	2,376,431	100.0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

자료: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2010)

2) 장애인 경제상태 현황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계층에 속하는 지에 대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은 전체의 71.6%가 하층에 속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8.1%, 상층에 속한다고 인식한 경우는 0.4%에 불과하였다. 등급별로 보았을 때, 등급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하층 및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4급이 평균 수준보다 높았으며 5~6급은 평균 수준에 못 미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정도의 측면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는 측면이 강했다.

〈표 4-10〉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별 주관적 소속계층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만원)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중증	경증	전체
하층	72.3	73.6	73.6	74.3	70.2	67.7	73.0	71.0	71.6
중층	27.2	26.1	25.7	25.3	29.6	32.0	26.6	28.6	28.1
상층	0.5	0.3	0.7	0.3	0.2	0.3	0.4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201,394	352,355	372,356	303,853	416,669	490,524	580,077	155,7074	2,137,151

주: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자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진 재정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총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50~99만원이 24.8%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0~149만원이 16.3%, 50만원 미만인 12.3%의 비율을 보여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37.1%가 100만원 미만의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0~199만원 11.2%, 200~249만원 10.4%, 250~299만원 5.9%, 300~349만원 6.3%, 350~399만원 4.1%, 400~499만원 4.1%, 500만원 이상은 4.4%의 소득분포를 보였다. 등급별 월평균 가구 소득은 1급이 175만 8천원, 2급이 174.4천원, 3급 179만 1천원, 4급 169만 8천원, 5급 194만 7천원, 6급 188만 7천원의 분포를 보였으며, 1~4급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장애인 가구 평균 181만 9천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5~6급이 평균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 월평균 가구 소득은 중증장애인이 174만 9천원, 경증장애인이 184만 6천원을 기록했는데,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음과 소득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등급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등급 내, 장애정도수준 내에서는 유사한 소득분포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1〉 등록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장애등급·장애정도별)

(단위: %)

가구월소득	장애등급별						중증 ¹⁾	경증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50만원미만	13.4	14.2	12.4	15.8	9.5	10.5	13.8	11.7	12.3
50-99만원	26.7	26.3	26.2	26.8	25.2	20.4	26.1	24.3	24.8
100-149만원	16.6	15.1	14.8	16.3	17.3	17.5	15.9	16.5	16.3
150-199만원	11.8	14.2	11.4	9.8	8.1	12.4	13.5	10.4	11.2
200-249만원	8.3	8.3	11.8	9.8	12.7	10.3	8.3	11.2	10.4
250-299만원	5.3	5.7	6.3	3.7	5.0	8.3	5.4	6.1	5.9
300-349만원	4.6	6.2	4.5	7.3	5.4	8.6	5.5	6.6	6.3
350-399만원	3.0	2.7	3.4	2.3	8.2	3.6	2.9	4.5	4.1
400-499만원	4.7	3.3	3.9	4.6	3.5	5.0	3.8	4.3	4.1
500만원이상	5.7	4.1	5.2	3.6	4.8	3.4	4.6	4.3	4.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천명)	201	352	372	304	417	491	579	1,557	2,137
평균(만원)	175.8	174.4	179.1	169.8	194.7	188.7	174.9	184.6	181.9

주: 1) 중증장애는 1급, 2급 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를 뜻함.

자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연구진 재정리

2013년 7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02천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가 108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수 대비 35.7%, 64세 미만인 194천명은 전체 대비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유형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수급자 대비 4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은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면서 확대된 차상위초과자는 89천명으로 29.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2〉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소득유형별): 2013년 7월

(단위: 명, 2013년 7월 기준)

구 분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합계	301,952	133,762	54,660	88,698	29,059
	65세 미만	194,152	108,301	25,166	41,944	22,968
	65세 이상	107,800	25,461	29,494	46,754	6,091
전체 수급자수 대비	합계	100.0%	44.3%	18.1%	29.4%	9.6%
	65세 미만	64.3%	35.9%	8.3%	13.9%	7.6%
	65세 이상	35.7%	8.4%	9.8%	15.5%	2.0%

〈표 4-13〉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추이(2010~2012)

(단위: 명)

연도	합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설수급자
2010년	257,968	145,007	54,951	27,644	30,366
	(100.0%)	(56.2%)	(21.3%)	(10.7%)	(11.8%)
2011년	308,759	138,380	61,248	79,504	29,627
	(100.0%)	(44.8%)	(19.8%)	(25.7%)	(9.6%)
2013년	308,000				



제5장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제1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제2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별 수급자수 및 소요재원 분석

5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

제1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1. 기초연금 도입안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202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인상시기 및 방법은 국회의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1월 국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산하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및 재구조화를 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이후 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제도간 재구조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대안만 제시하고 합의는 이루지 못하였다.⁴⁹⁾

최근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등 미래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도입 방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전제조건과 원칙들에 따라 우선순위와 다양한 개선방향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안을 검토하였다.

49) 소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기초노령연금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중장기적으로 점차 줄여서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향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낮추고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소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점차 줄여서 공공부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무게를 두고 논의하였으나, 향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사회보장제도간 관계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도입방향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기초연금 도입방향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근로기간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충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에 기본적인 수준의 연금소득을 확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적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볼 수 있으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는 등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수단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소득활동이 불안정하므로 사실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을 기초연금인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 분석을 위한 가정

추계기간은 2013년~2050년으로 하고 인구가정은 2011년말 통계청에서 장래인구추계 중 합계출산율 중위가정을, 경제변수가정은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5-1〉 인구가정: 2011년 통계청 인구추계

인구가정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중위가정)		1.23명	1.35명	1.41명	1.42명	
기대여명(세)	남자	77.20	79.31	81.44	83.42	85.09
	여자	84.07	85.67	86.98	88.21	89.28

자료: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표 5-2〉 경제변수 가정: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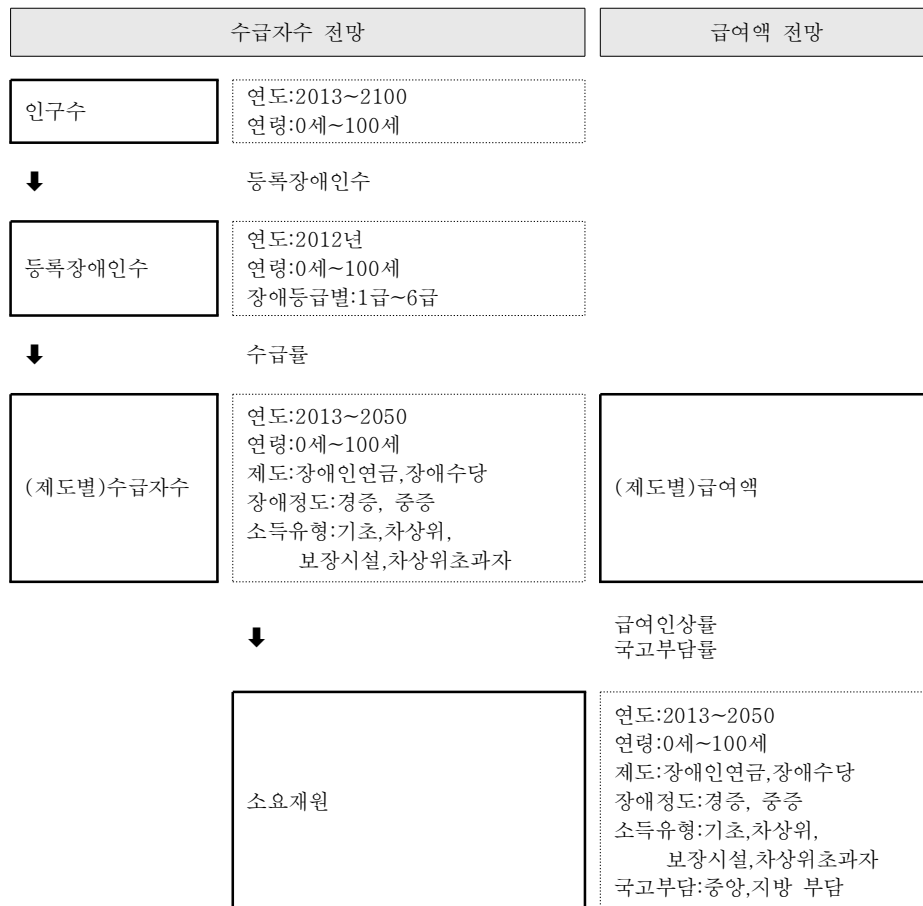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2~2020	2021~2030	2031~2040	2041~2050
실질경제성장률	4.1	2.8	1.7	1.2
실질임금상승률	3.6	3.3	2.9	2.6
물가상승률 ¹⁾	2.7/2.4	2.0		

주: 1) 2.7%는 2011~2015년, 2.4%는 2016~2020년 각각의 물가상승률임.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 방향.

[그림 5-1] 장애인연금 지출전망 개요



2. 등록장애인수 추계

등록장애인수는 인구수에 장애발생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되는 중증 장애발생률은 인구수 대비 중증 장애등록자수로,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로 구분하여 추계한다.

$$\text{등록장애인수}_{y,g,a,d} = \text{인구수}_{y,g,a} \times \text{등록장애인 비율}_{g,a,d}$$

y : 연도별, g : 성별, a :연령별, d :장애등급별

매년 증가하던 등록장애인수가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0년부터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는 처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향후 중증 장애발생률 전망을 위해 최근 10년간 장애발생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사실이나,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주춤한 것을 고려하여 2012년말 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인구의 자연증가분만 고려하여 중증장애인수를 전망한다.

〈표 5-3〉 전체인구수¹⁾ 대비 등록장애인수(2012년말 기준)

	중증 ²⁾	경증	합계
0~17세	0.5%	0.3%	0.8%
18~64세	1.0%	3.2%	4.2%
65세 이상	3.0%	13.7%	16.8%
전체 장애발생률	1.1%	3.9%	5.0%
18세 이상 장애발생률	1.3%	4.7%	6.0%

주: 1) 인구수는 2011년말에 발표된 통계청 장애인구추계를 적용함.

2) 중증장애는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뜻함.

자료: 저자계산

3. 현행제도 유지시 장애인연금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가. 수급자수 전망

장애인연금 적용률은 중증장애등록자수 대비 수급자수로, 소득하위 60%인 중증장애인을 연령집단별(18~64세, 65세 이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시설이용자)로 구분하여 전망한다.⁵⁰⁾

$$\text{장애인연금 수급자수}_{y,g,a,c} = (\text{인구수}_{y,g,a} \times \text{중증장애등록비율}_{g,a,d}) \\ \times \text{장애인연금 수급률}_{g,a,c}$$

y : 연도별, g : 성별, a :연령별, d :장애등급별, c :소득유형별

〈표 5-4〉 장애인연금 수급자수(2012년 기준)

(단위: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시설이용자	합계
18~64세	113,399 (52.4%)	26,914 (12.4%)	55,453 (25.6%)	20,823 (9.6%)	216,589 (100%)
65세 이상	27,469 (24.8%)	20,229 (18.2%)	52,403 (47.3%)	10,775 (9.7%)	110,876 (100%)
합계	140,868 (24.8%)	47,143 (18.2%)	107,856 (47.3%)	31,598 (9.7%)	327,465 (100%)

자료: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먼저 등록장애인수 전망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2,560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3,514천명, 2050년 4,079천명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는 2013년 327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44천명, 2050년 511천명에서 감소하여 2060년 484천명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수를 연령계층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3년 65세 미만인 자는 201천명, 65세 이상인 자는 127천명으로 65세 미만

50) 2010년 복지부 예산안의 연령집단별 분포를 2011년 복지부 예산안의 장애인연금 대상자수에 적용하여 기초율 추정

인자가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비 61.4%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이후 65세 미만 인 자는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140천명으로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대비 27.4%로 전망된다. 반면에 65세 이상인 자는 점차 증가하여 2030년대 초반부터는 65세 미만인 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2050년 371천명에서 소폭 감소하여 2060년 363천명으로 나타난다.

〈표 5-5〉 장애인연금 수급자수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연도	등록 장애인수	수급자수(천명)			전체 수급자수 대비	
		합계	18~64세 (기초급여)	65세 이상	18~64세 (기초급여)	65세 이상
2013	2,560	327	201	127	61.4%	38.6%
2015	2,653	340	203	137	59.8%	40.2%
2020	2,895	370	204	167	55.0%	45.0%
2025	3,203	407	194	213	47.7%	52.3%
2030	3,514	444	183	262	41.1%	58.9%
2035	3,773	475	171	304	36.0%	64.0%
2040	3,978	500	159	340	31.9%	68.1%
2045	4,067	510	150	360	29.4%	70.6%
2050	4,079	511	140	371	27.4%	72.6%
2055	3,971	497	132	365	26.6%	73.4%
2060	3,875	484	121	363	25.0%	75.0%

자료: 저자계산

나. 급여지출 전망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증가율⁵¹⁾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A값의 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text{기초급여액}_y = \text{기초급여액}_{y-1} \times \text{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 증가율}_y$$

51) 지난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임금상승률 반영)을 물가상승률로 재평가함.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은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text{부가급여액}_{y,c} = \text{부가급여액}_{y-1,c} \times \text{물가상승률}_y$$

y : 연도별, c :소득유형별

장애인연금의 급여지출규모는 2013년 5,11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1.5조원, 2060년에는 3.4조원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2013년 2,34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5년 1조원을 넘어서서 2060년에는 2조원으로, 장애인연금 전체 급여의 5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6〉 장애인연금 지출규모 전망: 소득하위 63% 지급

(단위: 십억원)

연도	장애인연금 급여지출		
	합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출
2013	511	234	277
2015	561	258	303
2020	947	551	397
2025	1,229	713	516
2030	1,536	883	653
2035	1,843	1,050	793
2040	2,139	1,207	932
2045	2,446	1,388	1,058
2050	2,757	1,581	1,176
2055	3,078	1,812	1,267
2060	3,389	2,021	1,368

자료: 저자계산

4.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가. 수급자수 전망

먼저 장애경증수당 수급자수는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자로 구분한 장애경증수당 수급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text{장애수당 수급자수}_{y,g,a,c} = (\text{인구수}_{y,g,a} \times \text{경증장애비율}_{g,a,d}) \times \text{장애수당 수급률}_{g,a,c}$$

y : 연도별, g : 성별, a :연령별, d :장애등급별, c :소득유형별

〈표 5-7〉 장애경증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시설이용	합계
18세이상 경증장애인수 대비 장애경증수당 수급자수	14.4%	6.8%	0.7%	22.0%

자료: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장애경증수당 수급자 334천명 추정자료 활용하여 수급률 산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 장애아동 수급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text{장애아동수당 수급자수}_{y,g,a,c} = (\text{인구수}_{y,g,a} \times \text{장애발생률}_{g,a,d}) \times \text{장애아동수당 수급률}_{g,a,c}$$

이 때 y : 연도별, g : 성별, a :연령별, d :장애등급별, c :소득유형별

〈표 5-8〉 장애아동수당 수급률(2011년 예산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시설이용	합계
0~18세 등록장애인수 대비 장애수당 수급자수	경증	6.5%	3.4%	1.2%	11.2%
	중증	10.7%	6.7%	4.6%	22.0%

자료: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5천명 추정자료를 활용하여 수급률 산정

장애수당 수급자수는 2013년 365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91천명, 2050

년 562천명에서 감소하여 2060년 533천명으로 전망된다. 장애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장애수당 수급자수는 2013년 340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69천명, 2050년에는 546천명에 이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60년 519천명으로 나타난다.

〈표 5-9〉 장애수당 수급자수 전망

연도	수급자수(천명)		
	합계	장애아동수당 (0~17세)	경증장애수당 (18세 이상)
2013	365	25	340
2015	377	24	353
2020	409	22	387
2025	450	22	428
2030	491	21	469
2035	525	20	504
2040	551	19	532
2045	562	17	544
2050	562	16	546
2055	547	15	532
2060	533	15	519

자료: 저자계산

나. 급여지출 전망

경증장애(아동)수당의 급여지출은 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text{장애(아동)수당}_{y,c} = \text{장애(아동)수당}_{y-1,c} \times \text{물가상승률}_y$$

y : 연도별, c : 소득유형별

경증장애수당의 경우 급여지출규모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21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2,750억원을 넘어서서 2050년에는 4,830조원으로 전망된다. 전체 장애(아동)수당 급여지출 역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3,320억원, 2060년에는 6,310억원으로 전망된다.

〈표 5-10〉 장애수당 지출규모 전망

(단위: 십억원)

연도	합계	장애아동수당 지출규모	경증장애수당 지출규모
2013	162	41	121
2015	173	41	132
2020	216	45	172
2025	271	51	220
2030	332	57	275
2035	392	61	331
2040	449	63	386
2045	499	63	436
2050	547	64	483
2055	586	67	519
2060	631	71	559

자료: 저자계산

5.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자수와 급여지출 추계

국민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애소득보장제도 대상자수⁵²⁾는 2013년 824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1,199천명, 2045년 1,355천명에 이른 이후 감소하여 2060년 1,271천명으로 전망된다.

2013년 등록장애인 중 32.2%가 장애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소폭 증가하여 2030년대에 34.1%까지 증가하나 이후에는 34%~33%를 유지하다 2060년에는 32.8%로 예상된다.

52)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동시 수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대상자가 중복될 수으나 그 규모가 적으므로 중장기 전망에서는 동시수급자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장애소득보장제도별 대상자수를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63%를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13년 327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44천명, 2050년 511천명 이후에는 감소하여 2060년 484천명으로 나타난다. 장애수당 수급자수 또한 2013년 365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91천명, 2050년 562천명으로 나타난 이후 감소하여 2060년 533천명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2013년 132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40년 288천명으로 최고조에 이른 이후에는 인구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장애인수도 감소하여 2060년 254천명으로 전망된다.

〈표 5-11〉 장애소득보장제도 수급대상자수 전망

(단위: 천명)

연도	등록장애인수	장애소득보장제도			
		합계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63% 수급대상)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장애연금
2013	2,560	824	327	365	132
2015	2,653	872	340	377	155
2020	2,895	979	370	409	200
2025	3,203	1,091	407	450	234
2030	3,514	1,199	444	491	264
2035	3,773	1,285	475	525	285
2040	3,978	1,339	500	551	288
2045	4,067	1,355	510	562	283
2050	4,079	1,346	511	562	273
2055	3,971	1,313	497	547	269
2060	3,875	1,271	484	533	254

자료: 저자계산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지출규모는 2013년 1.1조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4.3조원, 2050년에는 8.5조원으로 2060년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의 급여지출규모는 2013년 5,11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1.5조원, 2060년에는 3.4조원으로 전망된다. 장애(아동)수당 역시 2013년 1,62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3,320억원, 2060년에는 6,310억원으로 나타난다. 국민연

금의 장애인연금 급여지출액은 2013년 4,25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2.4조원, 2060년에는 6.6조원으로 전망된다.

〈표 5-12〉 장애소득보장제도 급여지출규모 전망

연도	급여지출(십억원)			
	합계	장애인연금 (소득하위 63% 수급대상)	장애(아동)수당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2013	1,098	511	162	425
2015	1,527	561	173	793
2020	2,420	947	216	1,257
2025	3,291	1,229	271	1,791
2030	4,275	1,536	332	2,407
2035	5,308	1,843	392	3,073
2040	6,315	2,139	449	3,727
2045	7,345	2,446	499	4,400
2050	8,453	2,757	547	5,149
2055	9,586	3,078	586	5,922
2060	10,636	3,389	631	6,616

자료: 저자계산

제3절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방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자 및 급여수준 인상

장애인연금액은 소득보장 성격인 기초급여와 추가 지출비용 보전개념인 부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향후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2014년부터 매년 일정하게 인상하여 2028년 이후에는 10%로 가정한다.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 적용시기를 앞당겨서 2014년부터 매년 1%p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를 적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지출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3〉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기초급여수준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소득하위 63% →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초연금 도입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 → 10%로 인상
- 시나리오 1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인상하여 2028년 이후 10% 적용
- 시나리오 2	201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 적용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지출규모를 전망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를 유지할 경우 2013년 2,550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 8,610억원, 2050년 1.7조원에 이르고 있다. 기초급여수준을 2014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인상하여 2028년 이후 10%로 인상할 경우 2015년 3,350억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0년에 1.7조원을 넘어서서 2050년에 3.4조원으로 전망된다. 2013년부터 1%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 지급할 경우 2015년 4,520억원, 202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출규모 전망

(단위: 천명, 십억원)

연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상확대시 (소득하위 70%) 대상자수	기초급여지출 규모		
		현행수준 유지시 (5% 지급)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8년부터 10% 지급 (시나리오 1)	2014년부터 1%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 10% 지급 (시나리오 2)
2013	212	234	234	334
2015	238	302	342	604
2020	239	646	947	1,291
2025	228	836	1,505	1,672
2030	214	1,036	2,072	2,072
2035	201	1,231	2,463	2,463
2040	187	1,415	2,830	2,830
2045	176	1,628	3,257	3,257
2050	164	1,854	3,707	3,707
2055	155	2,125	4,250	4,250
2060	142	2,371	4,741	4,741

자료: 저자계산

2. 장애등급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장애) 중 등급별로 추가되는 월평균 소요비용을 살펴본 결과, 총 추가비용은 전체 19만 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1급이 24만 5천원, 2급 17만 7천원, 3급 중복장애가 8만 1천원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총 추가비용, 장애관련비용 모두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등급이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른 필요비용의 지출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등급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이 가장 수준이 높았고, 의료비를 제외할 경우 1급에서는 보호·간병인 비용, 2급, 3급에서는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용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지급액 인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가급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유형⁵³⁾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제도로의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장장애의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현재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의해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의 체계에서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부터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에게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과 관계없이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등급별로 부가급여를 차등지급하는 방안⁵⁴⁾에 대해 살펴보았다.

53)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장애등급 혹은 장애유형으로 할 수 있으나, 장애유형을 반영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의 과다 및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표 5-15〉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개편방안

구분	비고
현행 제도 유지시 (소득유형별 차등지급)	2014년부터 물가상승률로 인상
개편방안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	
- 2014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하여 2024년 추가비용수준 ¹⁾ 으로 인상 (2025년부터는 물가상승률로 인상)	2014년 1급 64.1천원, 2급 46.3천원, 3급 중복장애 21.2천원
- 2014년부터 추가비용수준으로 지급 후 매년 물가상승률 로 급여수준 연동	2014년 ¹⁾ 1급 244.7천원, 2급 176.9천원, 3급 중복장애 80.9천원

주: 1) 장애등급별 추가비용수준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참조

〈표 5-16〉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개편에 대한 급여지출 전망

(단위: 천명, 십억원)

연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소득하위 70%)	부가급여지출 규모		
		현행제도 유지시	장애등급별로 차등지급	
			2013년부터 매년 일정비율로 인상하여 2028년부터 추가비용수준으로 인상	2013년부터 추가비용수준 적용
2013	327	277	277	277
2015	363	303	307	901
2020	391	397	615	1,101
2025	422	516	977	1,323
2030	453	653	1,132	1,575
2035	478	793	1,331	1,851
2040	497	932	1,539	2,141
2045	504	1,058	1,738	2,418
2050	503	1,176	1,927	2,681
2055	488	1,267	2,137	2,973
2060	473	1,368	2,369	3,294

자료: 저자계산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일반장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국민연금제도와 2010년에 도입된 무기여연금인 장애인연금,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국민과 일반장애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부가급여)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은 장애발생시점과 본인의 기여가 전제조건이 되므로 선천적 장애나 연금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성격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장애인 계층간 소득격차를 키움으로서 복지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장애급여가 전체 중증장애인의 절반 정도를 포괄하는 독일, 미국, 캐나다 등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체계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있어 그 역할이 취약한 상태이다. 도입된 지 24년이 지난 국민연금은 76천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연금으로 월평균 40만원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2011년 2,683천명) 대비 2.8%이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비 8.3%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서 장애인에 대한 빈곤완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연금간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어 주변적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독일, 캐나다 등과 같이 중추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편성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장기추계에 의하면, 현행 장애인연금을 유지하는 한 장애인연금수급자 규모나 노령연금수급자 대비 장애인연금수급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지속된다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열악한 근로활동 상태나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국고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제도내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에 그 목적이 있다.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현재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와 경증장애수당과 비교시 소득역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장애로 인한 실제추가비용의 상당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가급여를 인상한다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향후에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10%로 2배로 기초급여를 인상한다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반면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급에 그 목적이 있는 부가급여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급여를 인상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부가급여를 자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대상자와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추가지출비용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급여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추가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초급여액을 인상할 경우에 대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조정방식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도입할 경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인상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와의 관계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과 연동되어 매년 지급액이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초급여와 달리 부가급여는 지급액 인상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5%에서 10%로 2배로 기초급여를 인상할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급에 그 목적이 있는 부가급여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여 기초급여를 인상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부가급여를 자체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바 있다.

부가급여는 추가지출비용인 23.6만원⁵⁴⁾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기초급여수준을 인상할 경우 부가급여의 성격과 기능에 맞게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성격인 부가급여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실태조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가급여의 목적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특례적용, 장애등급의 심화 등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되지 못할 경우, 부가급여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어 같은 수준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소득격차가 발생한다.

54) 생활비용으로 지출하는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매월 평균 21만원을 추가 소요하는 것으로 조사됨(변용찬 외(2009) 참고).

부가급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등급 또는 장애유형⁵⁵⁾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제도로의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별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의 장애등급과 상관없는 소득유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즉 현재의 부가급여는 단순히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의해 기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체계에서 부가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지금의 문제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에 있어서 장애인연금 도입전 종전대상자이나 65세가 될 경우, 부가급여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가급여의 복잡성으로 인해 65세 이상 보장시설수급자와 경증장애수당자의 경우 소득역진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양적·질적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한계 및 제도 성격의 모호성(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지급대상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중증장애 전체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2배 이상 인상할 경우 현행제도에 비해 추가소요재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적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도입 및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장애인연금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인상해야 하는데, 기초연금 도입안은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하위 70% 대상으로, 최대 국민연금 급여산식 A값의 10%(2014년 기준 20만원) 지급하는 방안 2013년 11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로 개편시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최저생계비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⁵⁶⁾의 경우 당장 법률개정

55)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장애등급 혹은 장애유형으로 할 수 있으나, 장애유형을 반영하여 부가급여를 지급할 경우 업무의 과다 및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56)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 등의 유형별로 급여차등지원 및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이 필요하다. 개별급여화하여 생계급여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현행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및 부가급여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공무원연금공단(2011). 공무원연금통계 2010.
- 국민연금공단(각 년도). 국민연금 사업통계.
- 국민연금공단(각 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2008).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및 운영개선방향.
- 김성숙 외(2005). 장애연금 수급조건 개선방안, 국민연금연구원.
- 김성희 외(2008).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국제사회보장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외(2012). 2011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법, 서현사.
- 김진우(2010), 영국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6월, pp.46-55.
- 김태성·김진수(2007).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찬섭·유태균(2007). 사회복지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 박옥희(2007).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 박은수(2010). 장애인 소득보장론, 나남출판사.
- 변용찬 외(2006). 2005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8).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방안 연구(1) (II). 정책보고서2008-16-1, 1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9). 2008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9).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009-204호.
- 보건복지부(2013a). 등록장애인 현황.
- 보건복지부(2013b). 장애인연금관련통계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c).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신화연 외(2011).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화연 외(2011). 장애인연금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화연 외(2012).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용(200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필요성 및 기본방향, 보건복지포럼, 2009.1월, pp.81-90
- 윤상용 외(200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용 외(2010). 장애인연금 시행 방안 연구: 법. 제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상용 외(201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정립 및 발전방안, 보건복지부·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선우(2005). 장애인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층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28권.
- 이용하(2010).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이인재(2006).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통계청(2011). 한국통계연감 201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노동부(2010), EDI 2010 장애인 통계. 조사통계 2009-3.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index.jsp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지원 홈페이지. team.mw.go.kr/blss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is.nso.go.kr>

- HRSDC(2004.3). *A Physician's Guide to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
- HRSDC(2005). *Statistical Reports*.
- HRSDC(2008). *Annual Report of the Canada Pension Plan*.
- HRSDC(2010). *The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Adjudication Framework*.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09). *2008 Annual Report*.
- OECD(2006).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Norway, Poland and Switzerland*.
- OECD(2007).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ustralia, Luxembourg,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 OECD(2008).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Denmark, Finland, Ireland and the Netherlands*.
- OECD(2009).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Keeping on track in the economic turn*.
- OECD(2009.3).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 SWEDEN: Will the Recent Reforms Make it?*

- OECD(2010). *The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Project*.
- Rajnes, D.(2010). Permanent Disability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Japan. *Social Security Bulletin*, 70(1).
- Service Canada(2010.3). *Old Age Security and the Canada Pension Plan, A Reference Guide*.
- SSA(2007). *2007 Annual Report*.
- SSA(2009). *Fast Facts and Figures About Social Security 2009*.
- SSA(2010). *Social Security Disability Benefits*.
- Statistics Canada(2002). *A Profile of Disability in Canada 2001*.
- US Census Bureau(2005). *Americans with Disabilities 2005*.

[부록 1]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및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의 목적 및 필요성

- '14.7월 기초연금 도입 이전까지 2014년 상반기 중 장애인연금 시행을 위하여 현행 선정기준액의 조정방안을 도출하고, '14.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장애인연금이 확대 개편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이 필수적임
- 특히,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과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서, 현행 장애인연금 수급 중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전체 중증장애인의 공적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및 재산항목별 분석DB를 구축하고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분포 등 다양한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2014년 선정기준 조정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2. 분석내용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분석 DB 구축

- 분석자료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의 기초정보 &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DB 연계
 - 2013. 8월(자료추출 시점)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DB 중

2014년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약 52만명(행복e음 제
공) 중심으로, 행방 주민등록정보 기준으로 해당 장애인이 포함된 모
든 세대와 세대 내 가구원 개인을 추출하여 분석 DB 구축

□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 & 행복e음 정보 연계 분석
 -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전체 중증장애인 & 배우자 분석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선정체계 및 소득인정액 산
출방식을 모의 적용하여 개별 장애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 분석DB에 연계된 소득 및 재산항목의 기준시점을 2014년 행복e음 연
계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 시점에 맞도록 시차보정 변수 생성
 - 건강보험 보유 공적 행정자료 특성 상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제외 기타 공
적이전,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가액, 임차보증금 등 누락항목이 보정되지 않
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조정안 우선 도출
 - 건강보험 보유 공적자료 중에서 누락된 소득재산 항목을 기준으로 도
출된 ‘보정 전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
목별 기초통계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도출 및 반영하여
누락항목을 보정한 ‘보정 후 소득인정액’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기
준 조정안 도출
 - 모의 산출된 개별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연금 가구 균
등화 지수(1:1.6)를 적용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과 외에도 다양한 가구균등화
지수에 의해서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기준 분석결과 추가 제시
-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현황 및 분포 등을 분석하고 2014년 선정기준 조
정안 도출 및 제시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공적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2014년도 장
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전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 DB 구축

- 정책 모의분석(policy simulation)을 수행하고 신청률 및 수급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2014년 선정기준 조정안 제시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의 소득인정액 분포 분석 및 합리적 소득 인정액 산출방식 개선방안 마련

3. 분석방법

- (문헌연구) 2010년 이후 장애인연금 시행방안 연구 및 각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등 국내외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선행연구 검토
- (사례조사) 장애인연금 선정체계 사례분석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 (통계분석) 전체 중증장애인 및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공적 행정자료, 건강보험공단 보유 자료 연계 DB 구축 및 심층 통계분석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기준 조정안에 대한 사전 모의분석 및 결과도출을 통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성 및 수급률을 제고하는데 기여
- 향후 기초연금 전환 운영 시 참고할만한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조기에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지원

제2절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1.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 분석자료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및 배우자의 기초정보 & 건강보험공단 보유 공적 행정자료 DB 연계

- 2013. 8월말(자료추출 시점)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DB 중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 약 52만명(행복e음 제공) 중심으로, 행망 주민등록정보 기준으로 해당 장애인이 포함된 모든 세대와 세대 내 가구원 개인을 추출하여 분석 DB 구축
 - 전체 중증장애인 : 약 52만명(2013.8월말 기준, 2013.10 행복e음 제공)
 - 행복e음 소득재산 등 수급정보 추출 병합대상
 - 장애등급 : 1급 34.2%/ 2급 62.4%/ 3급 3.4%
- 행망 및 건강보험공단 공적 행정자료가 존재하는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및 기타 정보 원자료로 분석DB 구축
 - 중증장애인이 있는 모든 가구(약 45만8천 세대, 세대주 기준)와 이에 포함된 비중증장애인 가구원(약 82만명) 추출(중증장애인 및 가구원 약132만명) 및 소득재산 정보 원자료로 분석DB 구축
 - 전체 DB 구축대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보유 인적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추출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미신청자 포함) 대상 행복e음 추출 소득재산 정보 및 수급정보 병합

□ 소득 및 재산정보

- 소득정보 : 국세청 종합소득(2012년 귀속, 2013년 11월 연계), 건강보험보수 월액(2013년 10월 기준), 공적연금(2013년 10월 기준)
- 재산정보 : 행정자료 기준 주택, 토지, 건물, 선박/항공기 과세표준액(2013년 6월 기준, 2013년 11월 연계), 자동차세액
 - 분석DB 구축 시 연계된 소득 및 재산항목의 시점을 2014년 행복e음 연계 및 적용시점에 맞게 시차보정 필요
 - 연금 외 공적이전, 금융재산, 부채,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액 등 제외 (건강보험 누락항목 보정을 위하여 행복e음 수급정보 연계)

□ 장애인 및 배우자 분석 DB 구축

- 행방 세대주와의 관계 기준으로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한 수준 (0.1%) 이상의 분포가 존재하는 세대주와의 관계별로 부부 추출
 - 친척 및 동거인(5.9%), 세대주와의 관계로 부부 확인 불가능(0.3%) 제외 시, 전체 중증장애인의 93.8%를 분석대상으로 포함 가능
 - 그러나, 친척 및 동거인을 단독가구로 가정하여 포함시키면 전체 중증장애인의 99.7%를 분석 DB에 포함하여 보장단위(자산조사 범위)에 맞게 장애인 및 배우자로 DB 구축

□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최종 분석 DB(장애인 및 배우자)

- 분석대상 가구 및 가구원수 : 472,496가구 (698,614명)
- 가구유형 분포
 - 단독가구 : 276,378가구 (58.5%)
 - 부부가구 : 196,118가구 (41.5%)
- 가구 내 장애인 수 분포
 - 장애인 1인 단독 또는 부부가구 : 462,604가구 (97.9%%)
 - 장애인 2인 가구 : 9,892가구 (2.1%)
- 장애인 연령별 분포
 - 18~64세 : 300,104가구 (63.5%)/ 65세 이상 : 172,392가구 (36.5%)

2. 2014년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결과

: 건강보험 공적 행정자료 & 행복e음 정보 연계 분석 DB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모의분석 기본방향

-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전체 중증장애인 & 배우자 분석 DB를 구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인연금 선정체계를 모의 적용하여 개별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출

- 분석DB에 연계된 소득 및 재산항목의 기준시점을 2014년 행복e음 연계 및 적용시점에 맞도록 시차보정 변수 생성
 - 국세청 종합소득 : 4.86%(국세통계연보, 1인당 종합소득금액 3년 평균상승률)
 - 부동산 시가표준액 : 토지 3.41%(국토교통부, 2013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주택 -2.33%(국토교통부, 2013년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 근로소득 : 4.5%(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4월호, 2013년 예상 임금상승률)
 - '13년 1~6월 명목임금상승률 4.2%(고용노동부 2013년 8월 노동시장동향)
 -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급여액 : 1.7%(한국은행 2013년 7월 물가보고서, 2013년 연간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 무상보육·급식 등 제도적 요인 제거 시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 2.1%
 - 근로소득공제 상향 조정 (분석 DB 소득항목 중 건강보험보수월액 대상 적용) : 45만원('13) → 48만원(=2014년 최저임금 5,210원×4시간×23일) 공제 적용
 - 지역별 기초공제액(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건강보험 보유 공적 행정자료 특성 상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을 제외한 기타 공적이전소득, 금융재산, 부채, 자동차가액, 임차보증금 등 누락항목이 보정되지 않은 소득인정액 분포 우선 도출
 - 건강보험 보유 공적자료 중 누락된 소득재산 항목을 기준으로 도출된 '보정 전 소득인정액'과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기초통계와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추정모형을 도출 및 반영하여 누락항목을 보정한 '보정 후 소득인정액' 분포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기준 조정안 도출

□ 예산 반영 목표수급률 달성을 위한 소득인정액 상향 조정

- 각종 가구 균등화 지수에 의해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하위 100분위별 분포를 도출한 후, 2014년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최종 예산 기준 수급률(전체 중증장애인 52만명 대비 약 70%) 목표 수준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신청률 및 신청 탈락률(선정률)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함
 - 2013년의 경우 예산 기준 수급률(32만 7천명, 전체 중증장애인 52만명 대비 약 63%)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신청률 및 신청 탈락률(선정률)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상향 조정함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 선정기준 연구과정에서 예산기준 소득인정액 하위 56% 선정기준 도출을 위해 신청률 85%와 신청 탈락률(장애등급 재심사 탈락 등) 20%를 반영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규모 변화에 따른 예산 기준 목표 수급률 변화,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신청 탈락률(행복e음) 변화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목표 수급률에 부합하는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함

3. 2014년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분포 모의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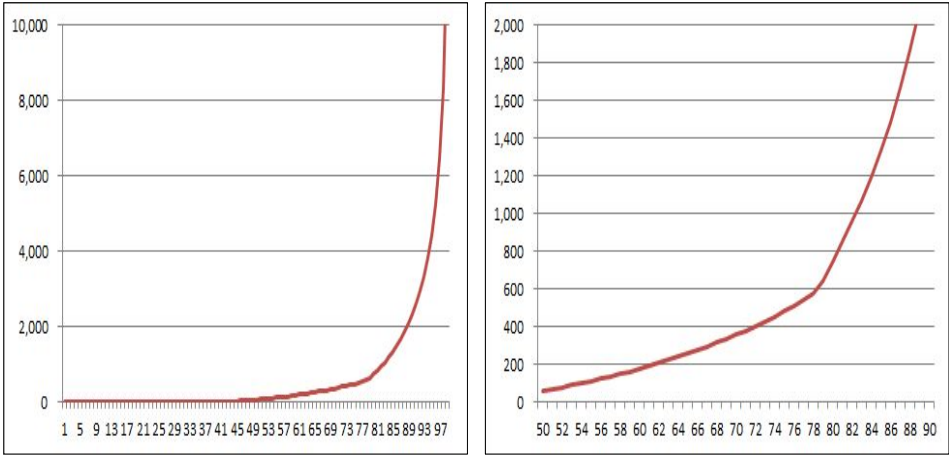
□ 중증장애인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및 백분위 경계값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단위: 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단위: 천원)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0	0	0
11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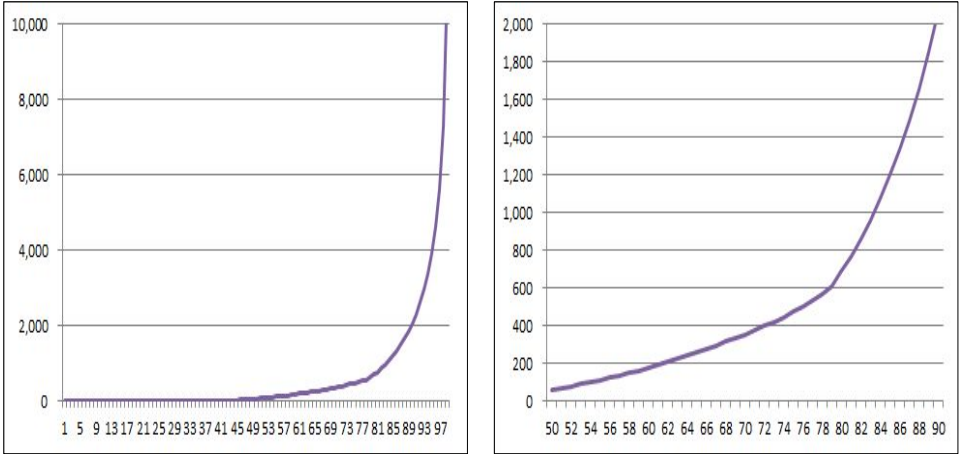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단위: 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단위: 천원)
12	0	0
13	0	0
14	0	0
15	0	0
16	0	0
17	0	0
18	0	0
19	0	0
20	0	0
21	0	0
22	0	0
23	0	0
24	0	0
25	0	0
26	0	0
27	0	0
28	0	0
29	0	0
30	0	0
31	0	0
32	0	0
33	0	0
34	0	0
35	0	0
36	0	0
37	0	0
38	1	1
39	2	2
40	4	4
41	6	6
42	8	8
43	12	12
44	17	17
45	23	23
46	29	29
47	37	37
48	44	44
49	52	52
50	61	61
51	69	69
52	80	80
53	89	89
54	101	101
55	112	111
56	124	124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단위: 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단위: 천원)
57	136	135
58	149	149
59	163	162
60	177	177
61	192	192
62	207	206
63	222	222
64	239	239
65	257	257
66	276	275
67	295	294
68	315	314
69	335	334
70	356	354
71	379	376
72	402	399
73	425	422
74	452	447
75	481	473
76	511	502
77	543	531
78	579	564
79	645	613
80	744	693
81	849	767
82	961	862
83	1,067	962
84	1,195	1,073
85	1,333	1,199
86	1,488	1,338
87	1,668	1,489
88	1,869	1,656
89	2,085	1,852
90	2,337	2,065
91	2,626	2,317
92	2,959	2,614
93	3,351	2,953
94	3,823	3,372
95	4,442	3,909
96	5,268	4,624
97	6,456	5,619
98	8,355	7,303
99	12,453	11,104

□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 중증장애인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포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0	0	37.51	37.51	37.50	37.50
1~100,000원 이하	1~160,000원 이하	16.47	53.98	16.48	53.98
120,000	192,000	1.74	55.72	1.75	55.74
140,000	224,000	1.64	57.36	1.63	57.37
160,000	256,000	1.48	58.84	1.48	58.85
180,000	288,000	1.41	60.25	1.41	60.26
200,000	320,000	1.32	61.57	1.33	61.59
220,000	352,000	1.30	62.87	1.31	62.90
240,000	384,000	1.20	64.07	1.20	64.10
260,000	416,000	1.10	65.17	1.11	65.21
280,000	448,000	1.09	66.26	1.11	66.31
300,000	480,000	1.04	67.30	1.03	67.34
320,000	512,000	1.02	68.32	1.04	68.39
340,000	544,000	0.94	69.26	0.95	69.34
360,000	576,000	0.95	70.21	0.96	70.30
380,000	608,000	0.88	71.09	0.90	71.19
400,000	640,000	0.86	71.95	0.86	72.05
420,000	672,000	0.82	72.77	0.84	72.89
440,000	704,000	0.80	73.56	0.81	73.70
460,000	736,000	0.72	74.28	0.86	74.56
480,000	768,000	0.72	75.00	0.73	75.29
500,000	800,000	0.64	75.64	0.68	75.96
520,000	832,000	0.66	76.30	0.69	76.65
540,000	864,000	0.60	76.90	0.65	77.30
560,000	896,000	0.59	77.50	0.60	77.90
580,000	928,000	0.56	78.06	0.57	78.47
600,000	960,000	0.40	78.46	0.38	78.85
620,000	992,000	0.27	78.73	0.28	79.13
640,000	1,024,000	0.23	78.96	0.24	79.38
660,000	1,056,000	0.20	79.16	0.22	79.60
680,000	1,088,000	0.21	79.37	0.25	79.85
700,000	1,120,000	0.21	79.57	0.24	80.09
720,000	1,152,000	0.22	79.79	0.23	80.33
740,000	1,184,000	0.18	79.98	0.29	80.61
760,000	1,216,000	0.17	80.15	0.31	80.92
780,000	1,248,000	0.20	80.35	0.21	81.14
800,000	1,280,000	0.18	80.54	0.25	81.38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820,000	1,312,000	0.19	80.72	0.21	81.60
840,000	1,344,000	0.20	80.93	0.20	81.79
860,000	1,376,000	0.17	81.10	0.19	81.99
880,000	1,408,000	0.18	81.28	0.22	82.21
900,000	1,440,000	0.20	81.47	0.23	82.44
920,000	1,472,000	0.16	81.63	0.17	82.61
940,000	1,504,000	0.17	81.80	0.18	82.80
960,000	1,536,000	0.19	81.99	0.19	82.99
980,000	1,568,000	0.23	82.23	0.19	83.18
1,000,000	1,600,000	0.24	82.47	0.17	83.34
1,020,000	1,632,000	0.17	82.63	0.21	83.56
1,040,000	1,664,000	0.16	82.79	0.17	83.73
1,060,000	1,696,000	0.14	82.93	0.17	83.90
1,080,000	1,728,000	0.20	83.13	0.16	84.06
1,100,000	1,760,000	0.16	83.29	0.17	84.23
1,120,000	1,792,000	0.16	83.44	0.16	84.39
1,140,000	1,824,000	0.14	83.58	0.14	84.53
1,160,000	1,856,000	0.18	83.77	0.19	84.72
1,180,000	1,888,000	0.13	83.90	0.14	84.87
1,200,000	1,920,000	0.18	84.08	0.15	85.01
1,220,000	1,952,000	0.14	84.22	0.14	85.16
1,240,000	1,984,000	0.13	84.35	0.16	85.31
1,260,000	2,016,000	0.15	84.51	0.13	85.45
1,280,000	2,048,000	0.12	84.63	0.13	85.57
1,300,000	2,080,000	0.14	84.77	0.16	85.73
1,320,000	2,112,000	0.13	84.90	0.14	85.87
1,340,000	2,144,000	0.15	85.04	0.15	86.02
1,360,000	2,176,000	0.18	85.22	0.14	86.16
1,380,000	2,208,000	0.12	85.34	0.13	86.29
1,400,000	2,240,000	0.13	85.47	0.13	86.41
1,420,000	2,272,000	0.11	85.58	0.13	86.55
1,440,000	2,304,000	0.13	85.71	0.16	86.71
1,460,000	2,336,000	0.13	85.84	0.11	86.82
1,480,000	2,368,000	0.12	85.95	0.13	86.95
1,500,000	2,400,000	0.11	86.06	0.12	87.07
1,520,000	2,432,000	0.11	86.17	0.13	87.20
1,540,000	2,464,000	0.11	86.28	0.12	87.32
1,560,000	2,496,000	0.14	86.42	0.12	87.44
1,580,000	2,528,000	0.12	86.53	0.11	87.55
1,600,000	2,560,000	0.11	86.64	0.12	87.67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현행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비율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1,620,000	2,592,000	0.11	86.75	0.12	87.79
1,640,000	2,624,000	0.11	86.86	0.11	87.90
1,660,000	2,656,000	0.10	86.96	0.12	88.02
1,680,000	2,688,000	0.10	87.06	0.11	88.14
1,700,000	2,720,000	0.10	87.16	0.10	88.24
1,720,000	2,752,000	0.09	87.26	0.10	88.34
1,740,000	2,784,000	0.10	87.36	0.12	88.46
1,760,000	2,816,000	0.12	87.48	0.10	88.56
1,780,000	2,848,000	0.09	87.57	0.10	88.66
1,800,000	2,880,000	0.09	87.66	0.10	88.76
1,820,000	2,912,000	0.11	87.77	0.09	88.85
1,840,000	2,944,000	0.09	87.86	0.10	88.95
1,860,000	2,976,000	0.10	87.96	0.09	89.04
1,880,000	3,008,000	0.09	88.05	0.11	89.15
1,900,000	3,040,000	0.08	88.13	0.09	89.23
1,920,000	3,072,000	0.09	88.22	0.09	89.32
1,940,000	3,104,000	0.08	88.31	0.09	89.41
1,960,000	3,136,000	0.13	88.44	0.09	89.50
1,980,000	3,168,000	0.09	88.52	0.10	89.60
2,000,000	3,200,000	0.09	88.61	0.09	89.69
2,000,000 초과	3,200,000 초과	11.39	100.00	10.31	100.00

4.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최종 조정안

□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기준 2014년 선정기준안 도출 근거

○ (기본원칙) 2014년 상반기 선정기준은 2013년과 동일한 조건에서 산출/
2014년 하반기 선정기준은 목표 수급률 70%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신청 수급
률 및 선정률을 상향 조정하여 도출

- 장애인연금 가구 균등화 지수 (1:1.6) 적용
- 신청 수급률 92% / 선정률 86.7% (신청 탈락률 13.3%) 반영

○ 중증장애인 규모 및 예산 기준 목표 수급률

- 상반기 : 소득인정액 하위 63% (중증장애인 52만명/2014년 상반기 예산
반영 수급대상 327천명)

- 하반기 : 소득인정액 하위 70% (중증장애인 52만명/ 2014년 하반기 예산 반영 수급대상 364천명)

○ 예산반영 신청 수급률 상향 조정 : 상반기 92% / 하반기 95%

- 2013년 장애인연금 수급 규모는 약 30만명 내외로, 2013년 예산반영 수급 대상 327천명 대비 약 92% 수준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당시에 신청 수급률 85%를 반영하였으나,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은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92% 수준임
- 2014년 하반기 수급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신청 수급률 증가요인 존재하는 상황임

○ 장애등급 조정 등으로 인한 신청 탈락률 감소 반영

- 상반기 : 13.3% (선정률 86.7%) / 하반기 : 10.2% (선정률 89.8%)
-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시 장애등급 재심사 등으로 발생하는 신청 탈락률을 20%로 반영하였으며, 2013년 선정기준 도출 시 13.3% 반영
- 지난 3년간 이러한 신청 탈락률은 감소하여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탈락자를 제외할 경우 3년 평균('10.7월~'13.6월)은 약 10.2% 수준임

○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한 소득인정액 분포로부터 선정기준 도출

- (상반기) 근로소득 48만원 공제
- (하반기) 근로소득 48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

□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최종 조정안

구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천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천원)
2014년 1~6월	목표 수급률 63%	신청 수급률 92% 선정률 86.7%	소득인정액 하위 약 79%	680	1,088
2014년 7~12월	목표 수급률 70%	신청 수급률 95% 선정률 89.8%	소득인정액 하위 약 82%	870	1,392

○ 2014년 상반기 선정기준

- 단독가구 '13년 선정기준 580천원 대비 100천원(17.2%) 상승
- 부부가구 '13년 선정기준 928천원 대비 160천원(17.2%) 상승

○ 2014년 하반기 선정기준

- 단독가구 '14년 상반기 선정기준 680천원 대비 190천원(27.9%) 상승
- 부부가구 '14년 상반기 선정기준 1,088천원 대비 304천원(27.9%) 상승

5.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분석DB 기준 노인 및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및 백분위 경계값 비교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천원)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0	0	0
11	0	0
12	0	0
13	0	0
14	0	0
15	0	0
16	0	0
17	0	0
18	0	0
19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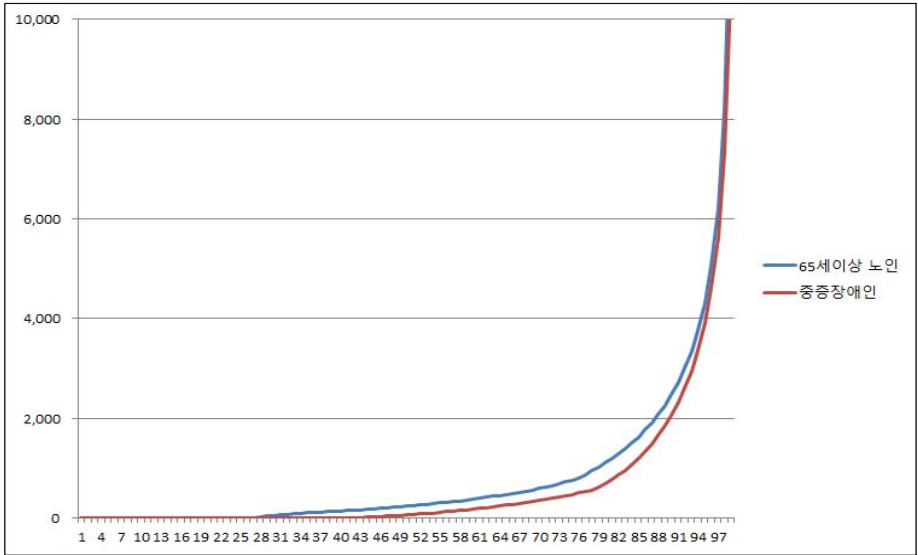
144 장애인연금 확대에 따른 기준 및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천원)
20	0	0
21	0	0
22	0	0
23	0	0
24	0	0
25	0	0
26	0	0
27	0	12
28	0	26
29	0	40
30	0	53
31	0	67
32	0	79
33	0	89
34	0	99
35	0	105
36	0	112
37	0	120
38	1	126
39	2	134
40	4	142
41	6	150
42	8	158
43	12	167
44	17	176
45	23	186
46	29	195
47	37	206
48	44	216
49	52	227
50	61	238
51	69	250
52	80	262
53	89	275
54	101	287
55	111	301
56	124	315
57	135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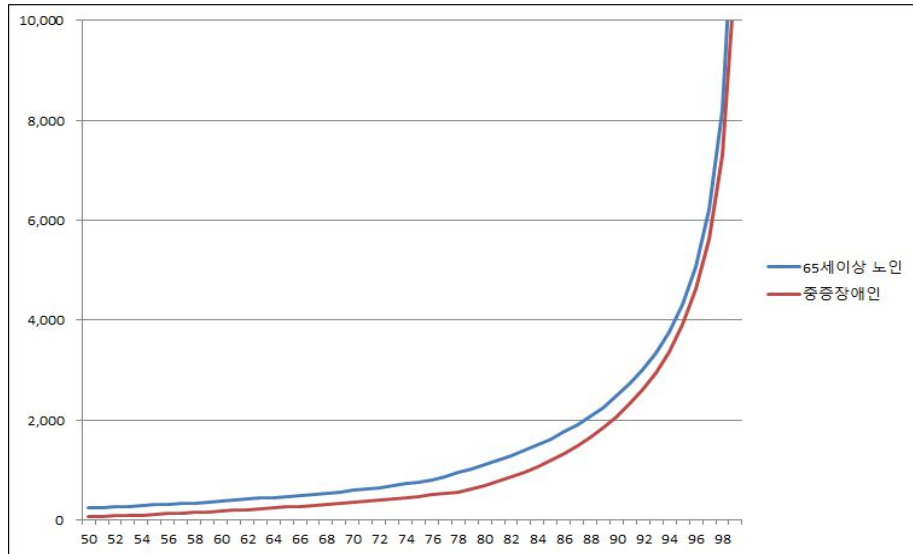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천원)
58	149	345
59	162	361
60	177	378
61	192	395
62	206	414
63	222	434
64	239	454
65	257	474
66	275	496
67	294	518
68	314	540
69	334	565
70	354	595
71	376	624
72	399	655
73	422	688
74	447	723
75	473	763
76	502	809
77	531	870
78	564	946
79	613	1,023
80	693	1,104
81	767	1,190
82	862	1,284
83	962	1,387
84	1,073	1,501
85	1,199	1,626
86	1,338	1,764
87	1,489	1,915
88	1,656	2,081
89	1,852	2,265
90	2,065	2,478
91	2,317	2,718
92	2,614	3,002
93	2,953	3,338
94	3,372	3,761
95	3,909	4,309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위(%)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천원)	근로소득공제 30%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천원)
96	4,624	5,074
97	5,619	6,219
98	7,303	8,204
99	11,104	13,016

□ 분위별 경계값 기준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전 구간)



□ 분위별 경계값 기준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분포 비교 (50~99% 구간)



□ 균등 조정 소득인정액 구간별 분포 비교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0	0	37.50	37.50	26.06	26.06
1~100,000원 이하	1~160,000원 이하	16.48	53.98	8.13	34.19
120,000	192,000	1.75	55.74	2.87	37.05
140,000	224,000	1.63	57.37	2.82	39.87
160,000	256,000	1.48	58.85	2.37	42.24
180,000	288,000	1.41	60.26	2.22	44.46
200,000	320,000	1.33	61.59	2.04	46.50
220,000	352,000	1.31	62.90	1.91	48.41
240,000	384,000	1.20	64.10	1.78	50.20
260,000	416,000	1.11	65.21	1.68	51.88
280,000	448,000	1.11	66.31	1.58	53.46
300,000	480,000	1.03	67.34	1.50	54.95
320,000	512,000	1.04	68.39	1.42	56.38
340,000	544,000	0.95	69.34	1.33	57.71
360,000	576,000	0.96	70.30	1.27	58.98
380,000	608,000	0.90	71.19	1.17	60.15
400,000	640,000	0.86	72.05	1.13	61.28
420,000	672,000	0.84	72.89	1.05	62.33
440,000	704,000	0.81	73.70	1.01	63.34
460,000	736,000	0.86	74.56	1.01	64.35
480,000	768,000	0.73	75.29	0.94	65.30
500,000	800,000	0.68	75.96	0.91	66.21
520,000	832,000	0.69	76.65	0.89	67.10
540,000	864,000	0.65	77.30	0.93	68.03
560,000	896,000	0.60	77.90	0.81	68.84
580,000	928,000	0.57	78.47	0.68	69.52
600,000	960,000	0.38	78.85	0.68	70.19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620,000	992,000	0.28	79.13	0.68	70.87
640,000	1,024,000	0.24	79.38	0.66	71.54
660,000	1,056,000	0.22	79.60	0.63	72.16
680,000	1,088,000	0.25	79.85	0.61	72.77
700,000	1,120,000	0.24	80.09	0.60	73.37
720,000	1,152,000	0.23	80.33	0.56	73.92
740,000	1,184,000	0.29	80.61	0.52	74.44
760,000	1,216,000	0.31	80.92	0.50	74.95
780,000	1,248,000	0.21	81.14	0.46	75.41
800,000	1,280,000	0.25	81.38	0.42	75.83
820,000	1,312,000	0.21	81.60	0.39	76.22
840,000	1,344,000	0.20	81.79	0.36	76.58
860,000	1,376,000	0.19	81.99	0.29	76.87
880,000	1,408,000	0.22	82.21	0.27	77.14
900,000	1,440,000	0.23	82.44	0.27	77.41
920,000	1,472,000	0.17	82.61	0.26	77.67
940,000	1,504,000	0.18	82.80	0.26	77.93
960,000	1,536,000	0.19	82.99	0.26	78.19
980,000	1,568,000	0.19	83.18	0.26	78.45
1,000,000	1,600,000	0.17	83.34	0.26	78.71
1,020,000	1,632,000	0.21	83.56	0.26	78.97
1,040,000	1,664,000	0.17	83.73	0.25	79.21
1,060,000	1,696,000	0.17	83.90	0.25	79.47
1,080,000	1,728,000	0.16	84.06	0.25	79.71
1,100,000	1,760,000	0.17	84.23	0.24	79.95
1,120,000	1,792,000	0.16	84.39	0.24	80.19
1,140,000	1,824,000	0.14	84.53	0.24	80.43
1,160,000	1,856,000	0.19	84.72	0.23	80.66
1,180,000	1,888,000	0.14	84.87	0.23	80.89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1,200,000	1,920,000	0.15	85.01	0.22	81.11
1,220,000	1,952,000	0.14	85.16	0.22	81.33
1,240,000	1,984,000	0.16	85.31	0.22	81.55
1,260,000	2,016,000	0.13	85.45	0.21	81.76
1,280,000	2,048,000	0.13	85.57	0.21	81.97
1,300,000	2,080,000	0.16	85.73	0.20	82.17
1,320,000	2,112,000	0.14	85.87	0.20	82.37
1,340,000	2,144,000	0.15	86.02	0.20	82.57
1,360,000	2,176,000	0.14	86.16	0.19	82.75
1,380,000	2,208,000	0.13	86.29	0.18	82.94
1,400,000	2,240,000	0.13	86.41	0.18	83.12
1,420,000	2,272,000	0.13	86.55	0.18	83.30
1,440,000	2,304,000	0.16	86.71	0.18	83.47
1,460,000	2,336,000	0.11	86.82	0.17	83.65
1,480,000	2,368,000	0.13	86.95	0.17	83.82
1,500,000	2,400,000	0.12	87.07	0.17	83.99
1,520,000	2,432,000	0.13	87.20	0.16	84.16
1,540,000	2,464,000	0.12	87.32	0.16	84.32
1,560,000	2,496,000	0.12	87.44	0.16	84.48
1,580,000	2,528,000	0.11	87.55	0.16	84.64
1,600,000	2,560,000	0.12	87.67	0.16	84.80
1,620,000	2,592,000	0.12	87.79	0.15	84.96
1,640,000	2,624,000	0.11	87.90	0.15	85.11
1,660,000	2,656,000	0.12	88.02	0.15	85.26
1,680,000	2,688,000	0.11	88.14	0.15	85.41
1,700,000	2,720,000	0.10	88.24	0.15	85.55
1,720,000	2,752,000	0.10	88.34	0.14	85.70
1,740,000	2,784,000	0.12	88.46	0.14	85.84
1,760,000	2,816,000	0.10	88.56	0.14	85.98

균등화지수(1:1.6) 적용 소득인정액 구간 (2만원 구간)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소득공제 확대 적용 시 2014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부부가구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1,780,000	2,848,000	0.10	88.66	0.13	86.11
1,800,000	2,880,000	0.10	88.76	0.13	86.25
1,820,000	2,912,000	0.09	88.85	0.14	86.38
1,840,000	2,944,000	0.10	88.95	0.14	86.52
1,860,000	2,976,000	0.09	89.04	0.13	86.65
1,880,000	3,008,000	0.11	89.15	0.13	86.78
1,900,000	3,040,000	0.09	89.23	0.13	86.91
1,920,000	3,072,000	0.09	89.32	0.13	87.03
1,940,000	3,104,000	0.09	89.41	0.12	87.15
1,960,000	3,136,000	0.09	89.50	0.13	87.28
1,980,000	3,168,000	0.10	89.60	0.12	87.40
2,000,000	3,200,000	0.09	89.69	0.12	87.52
2,000,000 초과	3,200,000 초과	10.31	100.00	12.48	100.00

[부록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비교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⁵⁷⁾

□ 조사대상

○ 2009년 ‘국민생활실태조사’는 3차로 구성

- 1차 기초조사,
- 2차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한 생활실태 및 가격조사,
- 3차 가구유형별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3차 가구유형별 조사’의 장애인가구를 조사대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대상가구: 장애인가구 2,339가구 중 일반가구소득의 50%이하인 장애인가구 648 가구

□ 조사방법: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조 하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

□ 장애추가비용의 정의

○ 비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대비 장애인 포함 가구에 대한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지출 보전비용으로 정의

- 기존에 계측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을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 공통비목 추가비용 + 특수비목 추가비용

○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구성항목

- 추가비용 비목 선정 시 장애범주별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비목만을 선정

57) 2013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현재 진행중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항목 및 비용 조사
- 법정 장애유형은 15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나 장애인범주가 지나치게 많으면 비용계측을 해도 행정적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종류별 등급별로 11개로 재범주화

법정장애유형(15종류) *장애인실태조사	최저생계비계측조사의 장애범주분류(11종류)
지체장애	지체중증, 지체경증
뇌병변장애	뇌병변중증, 뇌병변경증
시각장애	시각중증, 시각경증
청각장애	청각중증, 청각경증
언어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내부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투요투장애	
간길장애	

○ 장애추가비용 구성항목(8종류)

- 공통비목: 의료비, 교통비, 교육비, 휴대폰비, 주택수리비
- 특수비목: 보장구비, 보호 간병비, 재활기관 이용료

□ 조사결과

○ 장애인 1인당 추가 비용(월액, 천원)

장애범주		추가비용 공통항목					추가비용 특수항목			합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휴대폰비	주택수리비	보호간병비	보장구비	재활기관이용료	
지체	중증	35.7	28.4	0	25.8	32.5	172.1	6.0	40.9	341.4
	경증	30.9	14.8	0	24.4	0	131.1	0	0	201.2
뇌병변	중증	35.7	83.4	0	25.8	32.5	172.1	19.3	40.9	409.7
	경증	35.7	83.4	0	24.4	0	131.1	0	0	274.6
시각	중증	35.7	28.4	0	25.8	32.5	172.1	6.0	0	300.5
	경증	30.9	0	0	24.4	0	0	0	0	55.3
청각	중증	30.9	28.4	0	25.8	32.5	131.1	19.3	0	268.0
	경증	18.7	14.8	0	25.8	0	0	19.3	0	78.6
발달 장애		30.9	0	51.8	0	0	172.1	0	40.9	295.7
정신 장애		18.7	14.8	0	0	0	172.1	0	40.9	246.5
내부 장애		30.9	93.4	0	25.8	0	172.1	0	0	312.2

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장애범주별	추가항목별 추가비용(월액, 천원)									합계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통신비	보호·간병인	재활기관이용료	장애인보조기구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비	기타	
지체 장애	27.7	49.3	1.1	1.8	9.5	0.1	33.5	4.6	14.1	141.5
뇌병변 장애	28.6	122.3	5.8	3.1	53.6	3.7	17.6	1.9	37.6	274.2
시각 장애	10.8	18.3	2.0	28.9	6.2	0.0	12.4	4.5	1.1	84.2
청각 장애	4.2	5.9	0.7	24.1	0.8	0.6	82.1	1.0	0.2	119.6
언어 장애	17.2	28.7	32.2	24.2	0.0	2.8	0.0	15.4	5.9	126.4
지적 장애	36.0	23.8	49.7	8.7	11.0	13.3	1.9	35.2	8.8	188.4
자폐성 장애	85.7	64.5	200.4	12.5	17.0	69.7	9.6	41.8	1.8	503.2
정신 장애	12.5	50.8	0.0	2.5	2.2	0.3	0.0	3.7	1.8	73.8
신장 장애	48.8	167.3	0.0	6.4	4.5	0.0	10.8	1.9	1.9	241.6
심장 장애	20.9	127.7	0.0	1.1	0.0	0.0	2.0	9.0	11.6	172.3
호흡기 장애	33.4	162.8	1.1	1.1	3.0	0.0	44.9	0.0	8.7	255.0
간 장애	60.6	512.2	0.0	0.0	19.1	0.0	0.0	0.7	4.4	597.0
안면 장애	18.0	86.4	15.8	1.5	0.0	0.0	0.7	0.0	0.0	122.4
장루·요루 장애	14.0	91.7	0.0	1.1	31.6	0.0	117.2	0.0	8.2	263.8
간질 장애	7.2	61.5	0.0	3.6	10.3	0.0	79.6	3.8	1.7	167.8
전체	22.8	56.8	6.0	9.6	14.1	1.9	31.7	5.4	12.3	160.7
중증(1,2등급)	33.3	80.9	15.5	8.5	36.5	6.5	27.5	8.8	18.6	236.0

3. 조사방법 비교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생활실태조사」는 1차 기초조사, 2차 생활실태 및 가격조사, 3차 가구유형별조사(장애인, 노인, 한부모)• 3차 가구유형별 조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협조 하에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방식에 의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련 통계 수집방법 ① 인구센서스 : 장애인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과소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 조사항목이 매우 제한적② 가구표본조사③ 장애인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 →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표본을 추출 후 이들 가구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여부 판정• 가구판별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 조사• 사회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현황에 대한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파악												
표본 규모 (가구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조사 :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550개 조사구를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 추출하여 22,000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설정하고 19,261가구에 대해 조사 완료• 2차 조사 :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경상소득 기준) 40% 이하 가구 중에서 각각 2,087가구와 1,500가구를 표본추출• 3차 조사 : 장애유형 및 등급별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등 표본추출 된 1,500가구 중 장애인가구 900가구, 노인가구 395가구, 한부모가구 205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조사구로부터 섬, 시설 조사구를 제외하고, 보통 조사구(일반, 아파트)를 층화 확률 비례 추출에 의해 표본을 추출• 총 접촉 가구는 51,482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38,231가구이며, 장애인 가구는 5,628가구, 표본 장애인수 6,010명•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table><tr><td>조사 지역수</td><td>200지역</td></tr><tr><td>대상 가구수</td><td>47,458가구</td></tr><tr><td>완료 가구수</td><td>38,231가구</td></tr><tr><td>완료율</td><td>80.6%</td></tr><tr><td>조사완료 가구원수</td><td>105,496명</td></tr><tr><td>조사장애인수</td><td>6,010명</td></tr></table>	조사 지역수	200지역	대상 가구수	47,458가구	완료 가구수	38,231가구	완료율	80.6%	조사완료 가구원수	105,496명	조사장애인수	6,010명
조사 지역수	200지역													
대상 가구수	47,458가구													
완료 가구수	38,231가구													
완료율	80.6%													
조사완료 가구원수	105,496명													
조사장애인수	6,010명													
설문 내용 (조사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일반사항: 장애종류 및 등급, 기초보장수급형태, 의료보장, 근로능력정도② 일상생활③ 소득 및 장애인 관련 서비스 : 월평균소득, 보장구소유여부, 장애인관련 급여 및 서비스 수급여부, 지출항목별 추가비용*장애인 1인당 추가비용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공통비목 추가비용+ 특수비목 추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표 : 장애등록여부, 가구 내 총 장애인 수, 장애유형② 심층면접조사표(개별조사표) : 해당 장애의 유무, 최초 장애발견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 장애부위 등 & 장애공통 조사항목-보건·의료(월비용), 경제상태(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에 계측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만을 고려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1차조사에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도 포함.•장애인 추가비용 : 비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보전하는데 드는 비용•추가비용 비목 선정 시 장애인별 추가비용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인 비목만을 선정•장애인 추가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일반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장애인 가구만을 선정•장애종류는 원래 15개이나 장애인범주가 지나치게 많으면 비용계측을 해도 행정적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종류별 등급별로 11개로 재범주화•조사항목 중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항목 및 비용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 법정 장애 유형인 15가지 장애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등록장애인 뿐 아니라 미등록장애인을 포함 : 등록장애인이 전체의 96.4%이고 그 이외에는 신청 중이거나 보훈처등록자를 포함)- 장애가 있으면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법정 장애유형 외에 향후 범주 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해서 유무와 대략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 (ex.만성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																																																																																																										
조사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가구 및 장애인의 비율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2">가구</th></tr><tr><th>빈도(가구)</th><th>비율(%)</th></tr><tr><td>장애</td><td>2,339</td><td>12.2</td></tr><tr><td>비장애</td><td>16,833</td><td>87.8</td></tr><tr><td>합계</td><td>19,172</td><td>100.0</td></tr></table>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2">개인</th></tr><tr><th>빈도(명)</th><th>비율(%)</th></tr><tr><td>장애</td><td>2,445</td><td>4.5</td></tr><tr><td>비장애</td><td>51,812</td><td>95.5</td></tr><tr><td>합계</td><td>54,257</td><td>100.0</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가구유형조사(3차) 경상소득 및 생활비 <table><tr><th>구분</th><th>경상소득 (만원)</th><th>총생활비 (만원)</th></tr><tr><td>연평균</td><td>1530.0</td><td></td></tr><tr><td>월평균</td><td>127.5(추정)</td><td>132.2</td></tr><tr><td>표준편차</td><td>874.4</td><td>81.1</td></tr><tr><td>가구수</td><td>675</td><td>675</td></tr></table>		가구		빈도(가구)	비율(%)	장애	2,339	12.2	비장애	16,833	87.8	합계	19,172	100.0		개인		빈도(명)	비율(%)	장애	2,445	4.5	비장애	51,812	95.5	합계	54,257	100.0	구분	경상소득 (만원)	총생활비 (만원)	연평균	1530.0		월평균	127.5(추정)	132.2	표준편차	874.4	81.1	가구수	675	6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도 전국 장애인구 및 출현율 <table><tr><th></th><th>재가 장애인</th><th>시설 장애인</th><th>전체</th></tr><tr><td>장애인수 (천명)</td><td>2,611.1</td><td>72.3</td><td>2,683.4</td></tr><tr><td>출현율</td><td>5.47%</td><td>-</td><td>5.61%</td></tr></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table><tr><th>구분</th><th>가구소득 (만원)</th><th>가가지출 (만원)</th></tr><tr><td>지체 장애</td><td>204.4</td><td>165.0</td></tr><tr><td>뇌병변 장애</td><td>179.4</td><td>156.7</td></tr><tr><td>시각 장애</td><td>198.2</td><td>156.2</td></tr><tr><td>청각 장애</td><td>185.6</td><td>149.4</td></tr><tr><td>언어 장애</td><td>227.1</td><td>200.1</td></tr><tr><td>지적 장애</td><td>215.8</td><td>177.8</td></tr><tr><td>자폐성 장애</td><td>297.7</td><td>244.3</td></tr><tr><td>정신 장애</td><td>148.1</td><td>121.9</td></tr><tr><td>신장 장애</td><td>230.2</td><td>189.0</td></tr><tr><td>심장 장애</td><td>181.1</td><td>137.8</td></tr><tr><td>호흡기 장애</td><td>208.2</td><td>171.4</td></tr><tr><td>간 장애</td><td>243.7</td><td>253.3</td></tr><tr><td>안면 장애</td><td>108.0</td><td>100.8</td></tr><tr><td>장루·요루 장애</td><td>128.4</td><td>118.3</td></tr><tr><td>간질 장애</td><td>148.0</td><td>125.2</td></tr><tr><td>전체</td><td>198.2</td><td>161.8</td></tr></table>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체	장애인수 (천명)	2,611.1	72.3	2,683.4	출현율	5.47%	-	5.61%	구분	가구소득 (만원)	가가지출 (만원)	지체 장애	204.4	165.0	뇌병변 장애	179.4	156.7	시각 장애	198.2	156.2	청각 장애	185.6	149.4	언어 장애	227.1	200.1	지적 장애	215.8	177.8	자폐성 장애	297.7	244.3	정신 장애	148.1	121.9	신장 장애	230.2	189.0	심장 장애	181.1	137.8	호흡기 장애	208.2	171.4	간 장애	243.7	253.3	안면 장애	108.0	100.8	장루·요루 장애	128.4	118.3	간질 장애	148.0	125.2	전체	198.2	161.8
	가구																																																																																																											
	빈도(가구)	비율(%)																																																																																																										
장애	2,339	12.2																																																																																																										
비장애	16,833	87.8																																																																																																										
합계	19,172	100.0																																																																																																										
	개인																																																																																																											
	빈도(명)	비율(%)																																																																																																										
장애	2,445	4.5																																																																																																										
비장애	51,812	95.5																																																																																																										
합계	54,257	100.0																																																																																																										
구분	경상소득 (만원)	총생활비 (만원)																																																																																																										
연평균	1530.0																																																																																																											
월평균	127.5(추정)	132.2																																																																																																										
표준편차	874.4	81.1																																																																																																										
가구수	675	675																																																																																																										
	재가 장애인	시설 장애인	전체																																																																																																									
장애인수 (천명)	2,611.1	72.3	2,683.4																																																																																																									
출현율	5.47%	-	5.61%																																																																																																									
구분	가구소득 (만원)	가가지출 (만원)																																																																																																										
지체 장애	204.4	165.0																																																																																																										
뇌병변 장애	179.4	156.7																																																																																																										
시각 장애	198.2	156.2																																																																																																										
청각 장애	185.6	149.4																																																																																																										
언어 장애	227.1	200.1																																																																																																										
지적 장애	215.8	177.8																																																																																																										
자폐성 장애	297.7	244.3																																																																																																										
정신 장애	148.1	121.9																																																																																																										
신장 장애	230.2	189.0																																																																																																										
심장 장애	181.1	137.8																																																																																																										
호흡기 장애	208.2	171.4																																																																																																										
간 장애	243.7	253.3																																																																																																										
안면 장애	108.0	100.8																																																																																																										
장루·요루 장애	128.4	118.3																																																																																																										
간질 장애	148.0	125.2																																																																																																										
전체	198.2	161.8																																																																																																										